

# 2022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2022. 2. 28.



문화재청

## 목 차

I. 2022 정부혁신 추진방향 .....	1
II. 공통자율 추진과제 .....	3
1. 국민참여가 정책이 되는 정부 .....	5
2. 주민참여가 생활이 되는 지역 .....	12
3. 혁신으로 발전하는 지역사회 .....	22
4. 협업이 일상이 되는 문화 조성 .....	28
5. 디지털 서비스로의 혁신적 전환 .....	43
6.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선제적 제공 .....	49
7. 포용적 서비스 환경 구축 .....	59
8. 데이터·시스템으로 일하는 정부 구현 .....	61
9.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맞는 일하는 방식 정착 .....	75
10. 혁신문화 내재화 및 국내외 확산으로 국민신뢰 향상 .....	81
III. 기관별 계속 추진과제 .....	92
IV. 정부혁신 확산 방안 .....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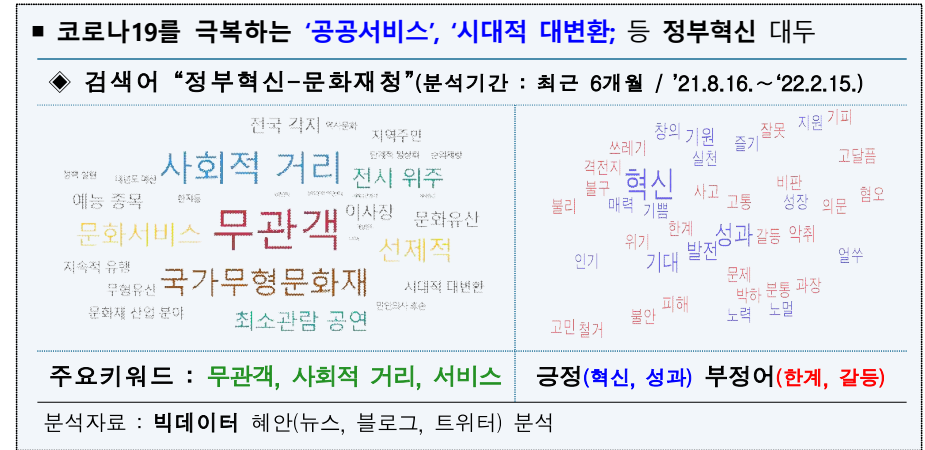
# I. 2022 정부혁신 추진방향

## □ 정책여건(부처공통)

- 2022년은 코로나19의 위기를 딛고 일어나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 회복이 본격 추진**되는 시기로, **디지털·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정 관리와 일상적 혁신의 내재화**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는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
- **국민이 주도**하고 **민·관이 공동생산**하는 **협력적 국민참여**로 **정부운영을 전환**하고 **지역사회에 혁신 문화 정착**
-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포용적·맞춤형 서비스**의 **선제적 제공**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 **디지털 기술·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예견**하여 **민첩**하게 해결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정부혁신**을 위한 기반 마련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			
목 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		
3대 전략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이 주도하는 <b>협력적 참여</b>로 정부운영 전환</li> <li>✓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로 <b>단계적 일상회복 지원</b></li> <li>✓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하는 <b>지속가능한 정부 구현</b></li> </ul>		
2022 주요 과제	참여·협력	1. 국민참여가 정책이 되는 정부	
		2. 주민참여가 생활이 되는 지역	
		3. 혁신으로 발전하는 지역사회	
		4. 협업이 일상이 되는 문화 조성	
	공공서비스	5. 디지털 서비스로의 혁신적 전환	
		6.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선제적 제공	
		7. 포용적 서비스 환경 구축	
	일하는 방식	8. 데이터·시스템으로 일하는 정부 구현	
		9.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맞는 일하는 방식 정착	
		10. 혁신문화 내재화 및 국내외 확산으로 국민신뢰 향상	

##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부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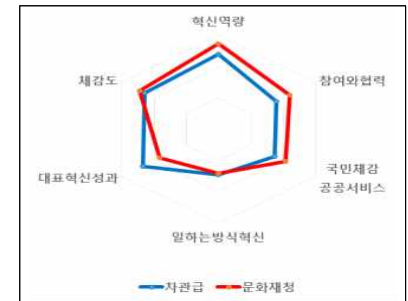


### ※ 월별 주요키워드

순번	전체	2021. 8월	2021.10월	2021.12월	2022. 1월	2022. 2월
1	무관객	무관객	주민지원	단계적일상회	우수기관	국민서비스
2	사회적 거리	문화서비스	역사문화	보존체계강화	평가결과	체험기회
3	문화서비스	선제적	지역주민	시대적대변환	협력국민체감	사람들

## □ 대표혁신성과 발굴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부문 개선 필요

- 혁신역량, 참여와 협력,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부문 성과가 우수하나, 일하는 방식 혁신 부문성과가 평균에 미달하고 있어 개선 필요
- (2021년 정부혁신 기관평가결과 : 보통)



⇒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혁신의 내재화 정책** 필요

## Ⅱ. 공통자율 추진과제

(공통자율 추진과제 총괄표 / 26)

분야	세부추진과제	소관부서	P	
참여·협력 (10)	<b>1. 국민참여가 정책이 되는 정부 (2)</b>			
	1. 국민이 참여하여 선정한 대표 문화유산 알리기	활용정책과	5	
	2. 문화유산 청원제도 첫 시행	법무감사담당관	9	
	<b>2. 주민참여가 생활이 되는 지역 (2)</b>			
	1. 지역주민과의 소통기반, 자연유산 민속행사 활성화	천연기념물과	12	
	2. 지역청년의 문화유산 일자리 첫 디딤돌 조성	정책총괄과 발굴제도과	17	
	<b>3. 혁신으로 발전하는 지역사회 (2)</b>			
	1. 주민 주도 고도(古都) 문화재 지역의 합리적 보존	고도보존육성과	22	
	2. 백제문화권 지역사회 취약계층 문화유산 공감 확산	전통대 총무과 부여연구소	25	
	<b>4. 협업이 일상이 되는 문화 조성 (4)</b>			
	1. 한-이집트 문화유산 보존협업 국제 네트워크 선도	국제협력과	28	
	2. 범정부차원의 협업을 통한 세계유산 역사왜곡 대응	세계유산정책과	32	
	3. 문화재 주변 산불 재난대응 상황업무 협력강화	안전기준과	36	
	4. 문화유산 협업 인센티브 강화	혁신행정담당관	40	
	공공서비스 (6)	<b>5. 디지털 서비스로의 혁신적 전환 (2)</b>		
		1. 첨단기술 기반의 문화유산 3차원 정보 서비스	디지털문화유산팀	43
2.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토지이용규제정보 방식개선		디지털문화유산팀 (보존정책과)	47	
<b>6.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선제적 제공 (3)</b>				
1. 국민의 품으로 더욱 다가서는 명승 백악산 탐방		천연기념물과	49	
2. 문화재지정서를 품격이 더하는 전통한지로 개선		혁신행정담당관 (유형근대고박연구소)	53	
3. 21세기 해양강국, 판옥선·거북선 문화유산 복원활용		해양 유물연구과	56	
<b>7. 포용적 서비스 환경 구축 (1)</b>				
1. 시각장애인도 함께하는 디지털 조선왕실문화 즐기기		고박 전시홍보과	59	

분야	세부추진과제	소관부서	P
일하는 방식 (10)	<b>8. 데이터·시스템으로 일하는 정부 구현 (5)</b>		
	1. 문화재수리 이력정보 관리로 예측시스템 강화	수리기술과	61
	2. 무형유산 통합관리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확대	무형원 조사기록과	64
	3. 차세대 문화재수리 종합정보플랫폼 구축	수리기술과	67
	4. 국민이 원하는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디지털문화유산팀	70
	5. 문화유산 데이터 친화적 행정문서 혁신	정보화담당관	72
	<b>9.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맞는 일하는 방식 개선 (2)</b>		
	1.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현장방재의 패러다임 전환	안전기준과	75
	2. 문화유산 RPA 도입 활성화	혁신행정담당관	78
	<b>10. 혁신문화 내재화 및 국내외 확산으로 국민신뢰 향상 (3)</b>		
1. 유네스코 본부(프)서 대한민국 문화유산 입지 다짐	무형원 전승지원과	81	
2. 문화재보존 행복주머니 씨앗가꾸기 확산	현충사관리소	85	
3. MZ세대 중심 조직문화 혁신	혁신행정담당관	89	

(계속 추진과제 / 3)

분야	세부추진과제	소관부서	P
계속 (3)	1.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매하는 혁신지행 공공조달	운영지원과	92
	2. 공공부문 균형인사 지속 추진	운영지원과 혁신행정담당관	94
	3. 정부혁신 확산 방안(교육, 학습, 홍보)	혁신행정담당관	96

# 1 국민참여가 정책이 되는 정부

## 1-1(1-1-1\*) 국민이 참여하여 선정한 대표 문화유산 알리기

\* (1-1-1) 분류번호는 행안부 과제분류 기준에 따라 과제번호 별도 기재

주관부서	활용정책과	관련 협업기관	무형문화재과, 궁능유적본부, 문체부, 한국문화재단 등
담당자	이광구 사무관	연락처	042-481-4745

### □ 추진배경

-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왜곡이 확산
  - 김치, 한복, 매듭장, 설날 등의 우리 전통문화를 중국의 문화로 해석
  - \* 중국 파오차이 국제표준 인가에 따른 김치 종주국 논란(20년)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한복 논란(22년)

### □ 현황(문제점) 진단

- (대외) 우리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왜곡 및 자국 문화화 경향이 심화
- (대내) 우리 전통문화유산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 노력 미흡

### □ 추진방향

- **관련부처·민간 부분과 공조하여 한복의 역사성** 등을 제대로 널리 알리는 홍보와 전승활성화 지원에 집중
  - \* 관련부처 및 민간부분과 공동대응을 위해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시의성 및 국내·외적 관심도 등 여건을 고려하여 **한복, 궁중음식과 떡 등 '22년 대표 문화유산**을 집중 홍보

### □ 세부 추진사항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관련부처와 기념행사 추진

- '한복입기' 문화재 지정, 각종 기념행사(학술대회, 패션쇼 등) 추진
- 한복 등 대표 문화유산을 주제로 감각적 영상을 제작하여 활용
  - 방송, 전광판,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홍보
- 대표 문화유산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재외문화원 및 세종학당 교육자료 로 보급
- 협업을 통해 K-무형유산 바로알리기 등 관련사업 추진
- 관계부처 및 반크 등 민간단체와 연계 홍보

#### < 주요사업 >

- (한복) Korea In Fashion 영상 해외 주요도시 전광판 홍보(2분기~)
- (경복궁) 궁중문화축전(상·하반기) 뮤지컬,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비대면 콘텐츠(ON생과방, ON달빛기행) 등
- (팔만대장경) 방문캠페인과 연계하여 사업 발굴
-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 및 지역 문화재활용사업 연계
- (궁중음식과 떡) 경북궁 별빛야행, 수라간 시식공감, 생과방과 연계한 외국인 홍보, K-무형유산 바로알리기(SNS, 떡 만들기 키트, 외국인 대상 떡 만들기 강좌 제작 등)

#### < 국민참여 '22년 대표문화유산 선정과정 >

- ▲ (1차 조사) 설문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맞춰 다국적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 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1,014명)에게 기초조사
  - (유형 5개) 송례문, 경복궁, 하회와 양동, 백제역사유적지구, 팔만대장경
  - (무형 5개) **한복**, 아리랑, 판소리, 조선왕조 궁중음식, 떡
  - \* 조사기간 '21. 9. 16. ~ 11. 14. / 아시아 260명, 유럽 250명, 북미 200명, 남미 116명, 아프리카 100명, 오세아니아 88명
- ▲ (2차 조사) 1차 조사에서 외국인이 선호하는 문화유산 10개 중 '22년 집중 홍보를 희망하는 유산에 대해 행안부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선정
  - \* 조사기간 '21. 12. 13. ~ 12. 24.<12일간>, 1,016명 국민응답
- ※ ('22년 대표 문화유산) ①**한복** 293명(28.8%), ②**경복궁** 155명(15.3%), ③**팔만대장경** 145명(14.3%), ④**백제역사지구** 121명(11.9%), ⑤**조선왕조 궁중음식과 떡** 118명(11.6%)

###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재외문화원 및 세종학당 한복 콘텐츠 배포·활용 기관 0개소	○ 재외문화원 및 세종학당 한복 콘텐츠 배포·활용 기관 80개소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지속적인 주변국 문화역사 왜곡 - 중국의 문화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 - 국민우려 및 정부대응 촉구	○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왜곡된 지식의 확산 방지 ○ 외국인의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형성하고 관심을 환기, 제고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한복 등 대표 문화유산 홍보를 위한 관련 부처(기관) 및 부서의 협업에 대한 의지·관심·노력이 부족한 상황
-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음

□ '22년 소요예산

- '한복' 홍보 영상 제작 및 해외 홍보 2억원, 교육 자료 제작 및 배포 활용 1억원
- K-무형문화유산 바로알리기 및 인류 무형문화유산 홍보 15억원

□ 추진체계

-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22년 대표 문화유산 선정 및 홍보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한복입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K-무형유산 바로알리기
- (궁능유적본부) 궁중문화축전 및 경복궁 관련 콘텐츠 홍보
- (한국문화재단)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프로모션
- (문체부) 해외한국문화원, 세종학당 등 교육·홍보자료 배포·활용

□ 추진일정

- 문화유산(궁궐, 독도 등 자연유산) 배경 홍보 영상 제작('22. 5월)
- 수라간 시식공감('22. 4월~) 및 궁중문화축전('22. 5월·10월)
- 해외 주요도시 및 각종 매체 홍보('22. 6월)
- 백제역사지구(공주, 부여, 익산) 세계유산 미디어아트('22. 9~10월)
- '한복입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22년 하반기 이전)

- 해외한국문화원 및 세종학당 교육·홍보 자료 배포('22년 하반기)
- '23년도 올해 대표 홍보 문화유산 선정('22년 하반기)

□ 홍보계획

- '22년 대표 홍보 유산 선정 보도자료 배포('22.2.17.)



- 인지도 높은 유명인의 한복 모습 공개 노출 지원('22.2월)



- 한복 등의 인지도 확산을 위한 캠페인 영상을 국내외 매체에 노출
  - 글로벌 홍보매체 네트워크(방송, 언론 등) 활용 홍보
  - 해외 주요도시(뉴욕, 런던 등) 전광판, 영상 플랫폼\* 등
    - \* 넷플릭스, CNN(한국지사), 히스토리채널, 디스커버리,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 초청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의 한복 체험·바로알리기 등 홍보
  - \* 기존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K-pop 등 한류스타 나레이션 추가(매년)
- 인천공항에 문화유산 홍보관(여행자센터) 조성·운영

**1-2(1-2-1) 문화유산 청원제도 첫 시행**

주관부서	법무감사담당관	관련 협업기관	행정안전부(국민참여혁신과)
담당자	유철웅 사무관	연락처	042-481-4648

**□ 추진배경**

- 「청원법」 제정('20.12.22)으로 새로운 청원제도가 본격 시행('21.12.23)
- 행정안전부에서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청원권 보장을 위해 기존 「청원법」을 전부개정하고 시행령법이 제정됨에 따라
- 우리 청도 문화유산 분야에서 청원 신청·심의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할 수 있도록 하며, 청원제도 활성화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규 등을 정비하여 청원제도 시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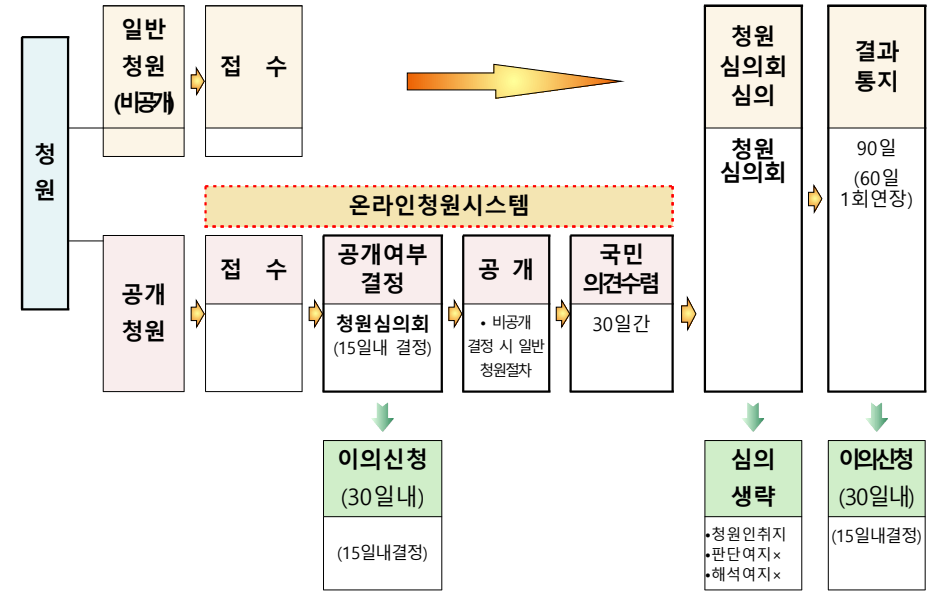
**□ 현황 진단**

- 「청원법」 전부개정과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나, 우리 청 직제 시행규칙과 위임전결 규정 개정 및 심의회 운영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세부 추진사항**

- 청원업무를 반영한 직제 시행규칙 및 위임전결 규정 개정
- 문화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마련 및 구성
  - 구 성: 위원장(청장 지명) 포함 5~7명 (전체위원 1/2 이상 외부위원)
  - 운 영: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사항: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의 조사결과 처리 등
- \*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본청 규정을 준용하거나 기관 실정에 맞는 규정 마련 및 심의회 구성·운영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산하기관 청원제도 운영
  - \*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결정에 따른 공개는 '22.12.23일부터 시행

**□ 업무처리 절차**



**□ 성과목표(또는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청원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함	○ 문화재행정에 국민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폭넓게 활용 가능
○ 청원제도 처리절차 및 기한 준수 여부	○ 국민의 소리와 반응에 귀 기울이고 국민 의사를 존중하는 문화재행정 구현
	○ 청원공개, 접수·처리 등 청원절차 준수 및 청원인에게 상황통지 철저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문화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 (3/4분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 전결규정」 개정(3/4분기)

- '공통사항'에 '청원제도운영 및 개선' 반영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 '청원사무의 총괄 및 청원사무 관련 제도의 개선' 반영

□ '22년 소요예산

- 6백만원 (위원 참여수당, 여비 등)

□ 추진일정 및 홍보계획

- 문화재청 소속 및 산하기관 청원담당자 교육 실시 (상반기)
- 청원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안) 마련 : ~ '22년 중
  - 「문화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 및 심의회 구성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 전결규정」 개정
- 청원제도 시행 관련 카드뉴스(기관 SNS, 블로그 등)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 홍보(연중, 수시)

## 2 주민참여가 생활이 되는 지역

### 2-1(2-1-1) 지역주민과의 소통기반, 자연유산 민속행사 활성화

주관부서	천연기념물과	관련 협업기관	지자체 문화유산 관련부서, 지역 자연유산 보존회 등
담당자	이원호 연구관	연락처	042-481-4986

□ 추진배경

- 기후위기와 도시화로 위협에 처해있는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과 지역주민의 연결을 통해 거점형 보존관리제도 정착 및 자연유산 마을 공동체 활동프로그램 확대로 지역 주민간 자긍심 고취 및 소통기반 마련
  - '자연유산 민속행사' 중 유형별 대표 사업을 선정, 전문가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이용자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
  - \* '03년 2건(0.1억원), '15년~'19년 53~66건(1.4억), '20~'22년 67건(1.4억)

□ 현황(문제점) 진단

- 자연유산이 소재한 마을주민의 고령화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 간 소통단절과 지역소멸의 지역 자긍심 결여 등의 마을공동체 붕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 등 분석과 개선 필요
  - 자연유산 민속행사(2022년 기준) 67건 중 56건 이상(83%)이 마을주민 참여형\* 행사로 지속적인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참여 인원 부족
  - \* 2022년 기준 지역별 민속행사 분포 현황(68건 중 60건(90%)이 지방에 분포)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8	2	1	1	2	1	1	7	2	7	4	9	14	15	2

-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사 취소로 자연유산 향유 기회 축소
  - \* 2020년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목신제 등 16건 취소, 2021년 삼척 갈전리 서낭제 등 9건 취소

## □ 추진방향

- 민속행사 점검(모니터링 및 컨설팅) 및 분석(만족도 조사)을 통한 자연유산 유형별 지역 주민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거점별 자연유산 보존·관리 시스템 마련
- 양방향 SNS 기능을 활용한 '자연유산 당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참여대상 확대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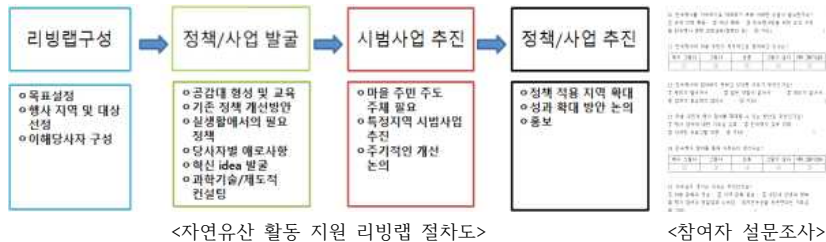
## □ 추진절차



## □ 세부 추진사항

- (운영 컨설팅) 자연유산 전문가집단을 통해 민속행사 중 유형별 대표적인 행사 21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 맞춤형 정보 제공 전통지식 및 의식 기록화 작업, 홍보 전략 등 컨설팅 및 사후 지원(자연유산 지역공동체 활동 리빙랩) 제도 도입

\* 자연유산 활동지원 리빙랩 운영: 자연유산 민속행사별 참여자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상호 협력하여 개선안 등 활성화 방안제시



- (마을주민 자생력 제고) 마을주민 대상 제례 행사 전반과 자연유산의 가치, 전통지식 등을 발굴·교육하여 마을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연유산 보존관리 운영 및 마을내 주민협력 강화기반 마련

\* 『당산나무 할아버지』 제도운영 : 문화재청의 자연유산 지킴이 활동교육을 통해 민속행사 주관 및 자연유산 상시모니터링 임무수행, 자연유산 해설사 등으로 지속가능한 주민참여 유도



2021 합천 황의대 소나무 나무마을 당산제



2021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당산제



2021 예천 천향리 석송령 당제

- (홍보방안 강화) 자연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민속행사 관련 스토리텔링 개발, 비대면 행사참여 확대를 위한 실시간 SNS 커뮤니티 운영, 자연유산 지역별 굿즈 제작 등) 및 양방향 소통 가능한 매체 활용 홍보 확대

\* 온라인 당제 커뮤니티 운영 : 당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타지의 지역주민 후손 및 관광객들을 위한 온라인 실시간 당제 참여 커뮤니티 운영 및 상시 자연유산 정보제공



<2022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 동제 온라인커뮤니티>



<2011년 경인지방우정청에서 만든 천연기념물 식물 우표>

- (예산 확대추진) 자연유산 유형별 가치, 주민 참여도, 지자체 관심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행사별 예산 확대 지원 및 신규사업 발굴

\* 연도별 소요예산안 및 지원대상(건별 2천만원 지원(제례행사, 기록화,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연도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소요예산	16억원	20억원	24억원	28억원	32억원
지원대상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당제 등 80건	부산 죽막동 수성당제 등 100건	남해 가천마을 밥부덤 동제 및 미륵제 등 120건	제주 남읍리 마을제 등 140건	홍도천연보호 구역 마을제 등 160건

※ 사업 발굴 및 자연유산 신규 지정에 따른 연별 20건 확대 지원



##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유산 민속행사 모니터링에 대한 문화재청의 지원 건수 1~2건</li> <li>○행사 후 만족도 조사 후 피드백 결여에 따른 개선미비</li> <li>○보도자료 건당 1~2건</li> <li>○1건당 마을 주민 및 지자체 참여자 평균 10~20명 수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유산 민속행사 모니터링에 대한 문화재청의 모니터링 지원 건수 21건</li> <li>○행사 후 만족도 조사 68건 실시, 사후지원 및 개선방안 도출</li> <li>○양방향 SNS홍보, 유튜브 등 건당 5건</li> <li>○1건당 비대면 행사와 병행 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다양한 대상 참여유도로 건당 10배 이상 증가 예상</li> <li>○『한국의 자연유산 민속행사』 홍보책자(국제판) 발간</li> <li>○자연유산 보존관리분야 및 지역공동체 협력분야(당산목 할아버지, 온라인 당제 커뮤니티)프로그램 운영</li> </ul>

###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주민의 고령화 및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축소 및 취소건 증가, 지역주민의 관심도 부족, 지자체 자체 모니터링으로 매년 유사 규모의 행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주민회 주최로 진행 인력 부족에 따른 홍보 부족, 행사 확산효과 미흡</li> <li>- 행사를 주최하는 마을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부족함에 따라 주민 참여도 동력 저하</li> <li>- 자연유산 당제 오프라인 행사 진행에 따른 행사 참여 인력 및 홍보 부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유산 민속행사의 관계기관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으로 행사별 마을주민,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연유산의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마을주민의 자생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전문가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따른 『한국의 자연유산 민속행사』 간행물 발간(국제판)발행 국제홍보, 한국대표관광지 소개 활용</li> <li>- 『당산나무 할아버지』 명예 활동증을 부여하여 행사 참여인력의 자긍심 고취로 지속적인 참여 유도</li> <li>- 자연유산 당제 대면 비대면 병행 운영 및 기복효과 확산을 통한 참여율 제고</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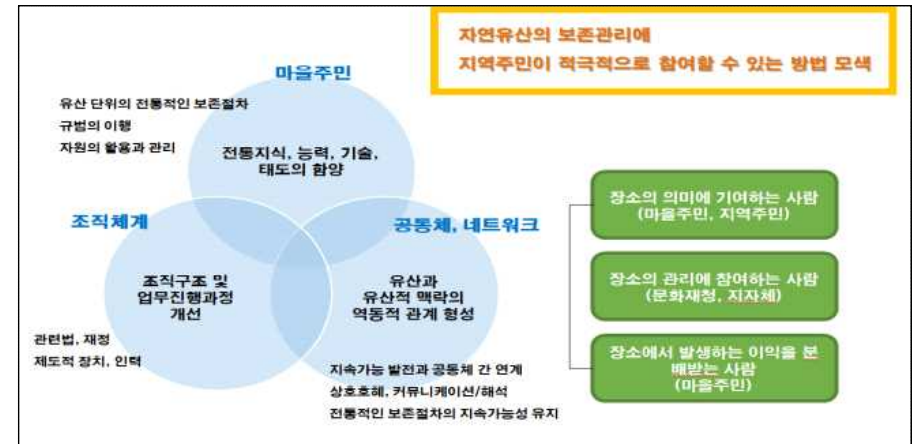
##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복권기금 등을 활용한 소규모 지원에 따른 행사 예산 부족 및 집행의 복잡성, 마을 주민의 노령화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

##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예산 집행 방법을 당초 지자체 경상보조지원(국비70%, 지방비30%)에서, 민간보조 및 지자체 경상보조로 이원화하여 컨설팅 기능 강화

## □ 추진체계



## □ '22년 소요예산

- 서울 선농대제 등 68건 1억 3천 5백만원, 모니터링 2천만원

## □ 추진일정

- 자연유산 민속행사 현장 모니터링(만족도 조사 포함) 및 운영 전반 컨설팅( '22. 1~12월), 자연유산 민속행사 촬영 지원( '22. 5~9월)

## □ 홍보계획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연유산 민속행사 보도자료 배포(5월)
- 원성 성황림 성황제 등 5곳 홍보영상 제작보급 및 행사 촬영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송출

## 2-2(2-7-1) 청년의 문화유산 일자리 첫 디딤돌 조성

주관부서	정책총괄과 발굴제도과	관련 협업기관	박물관 등 문화재 관련 공공 및 민간기업
담당자	김영아 사무관 이상원 사무관	연락처	042-481-4815 042-481-4957

### □ 추진배경

- 코로나 19로 인한 **신규채용 축소**로 청년층 취업의 어려움 대폭 상승
  - 2020년 기준 청년층 취업률은 코로나 19 발생 이후 지속 감소
- 전국 대학박물관 소장 장기 미정리 유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전시·교육 등) 시급

### □ 현황(문제점)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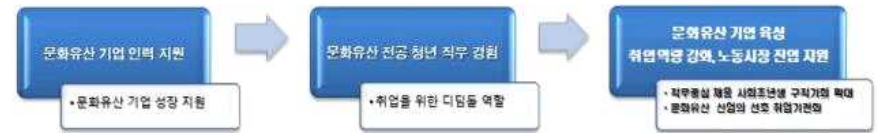
- 인문계열 대학졸업자의 취업기관 및 기회부족으로 취업률 저조 지속
  - 대학졸업자의 평균취업률 중 인문계열 전공자의 취업률 최저(56.2%)
- 경력부족은 청년의 적극적 구직활동 저해요인으로 작용
- 직무중심의 채용문화는 사회초년생의(취업준비생) 구직기회 축소
  - 구직활동 시 취업기관이 요구하는 '경력직 선호'(47.4%)가 가장 큰 어려움
  - 취업기회 및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의 사실상 구직 포기상태 (61.1%)



- 대학박물관 예산·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과거 발굴된 유물 대부분이 미정리 상태로 장기 보관되면서 유물의 분실·훼손, 은닉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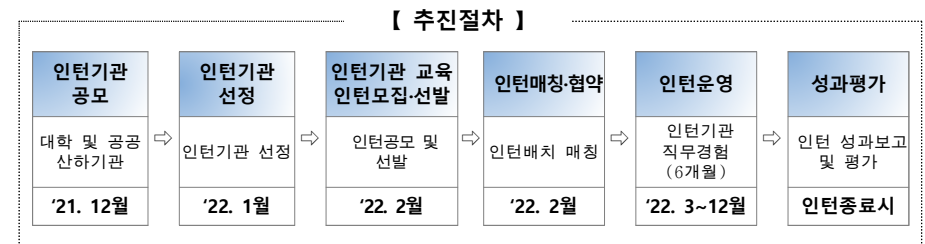
### □ 추진방향

- 문화유산 분야 수요기관에 필요한 청년 인턴 매칭 지원으로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산업의 성장 지원
- 문화유산 청년 체험형 일자리 제공으로 미래 문화재 전문인재 육성
- 산·학 연계를 통한 청년 인턴수요에 충족하는 참여기관 다양화
  - 문화유산 분야 청년이 신뢰하고 선망하는 산업분야 인턴 참여 유도
- 실질적인 취업 연계 지원 및 사업 홍보 강화
  - 적재적소 인턴 배치 운영성과로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으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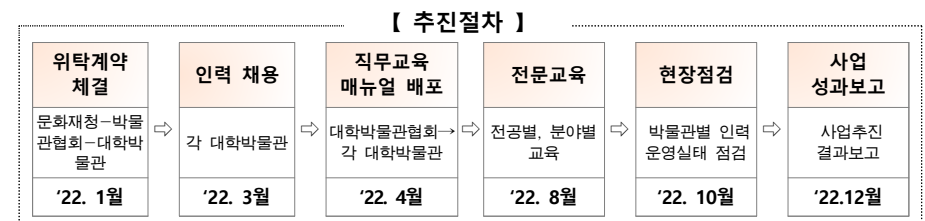


### □ 추진절차

- 문화유산 산업 인턴 지원 사업



-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 세부 추진사항

- (문화유산 산업 인턴) 문화재 보존관리 활용·기획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에 문화재 분야의 취업준비 청년 인턴 200명 매칭 지원
- (대학박물관 유물정리) 28개 대학박물관에 인력 90명을 채용하여 160개 유적, 11만여점의 미정리 유물의 국가귀속 등록 및 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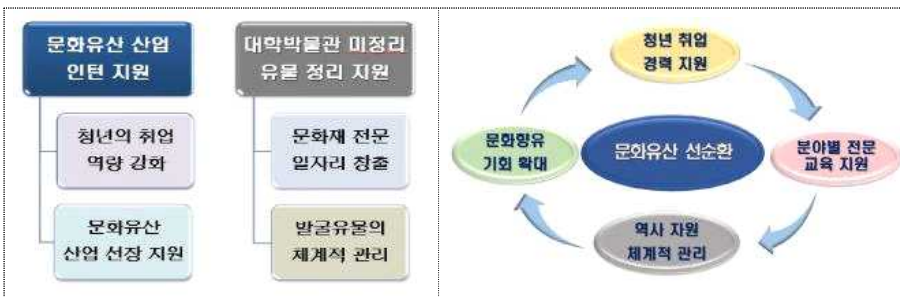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분야 전문인력 역량부족 및 문화재 기업 취업기회 부족</li> <li>○ 전국 대학박물관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11만여점 관리실태 개선 시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 분야 수요기관에 필요한 청년 인턴 200명 운영으로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산업 성장 지원</li> <li>○ 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 및 새로운 역사 자원 확보, 관련 분야 청년 일자리 90명 창출</li> </ul>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분야 취업준비 청년의 취업 전 경력부족으로 취업기회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전문기관 전문인력 부족</li> <li>- 문화재 전공자 취업전 일경험 부족</li> </ul> </li> <li>○ 인력 부족에 따른 대학박물관 매장 문화재 미정리 유물 체계적인 관리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 분야 산·학 취업 협력체계 구축으로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 및 확대</li> <li>○ 유물의 관리 지원으로 역사자원 확보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굴유물 활용으로 국민의 문화서비스 향상</li> <li>- 미취업 청년 및 여성 고용 창출</li> </ul> </li> </ul>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인턴의 정규직 채용 확대로 실질적 일자리 창출 연계 필요
  - 인턴수료 성과 우수자 채용 연계를 위한 기업 협력체계 구축
- 청년 인턴수요에 충족하는 참여기관 다양화로 문화유산 산업 확장 필요
- 사업 진행단계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예산 반영 필요
  - 유물 실측, 보존처리, 보고서 작업 등 단계별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급여수준 상향 및 고용안정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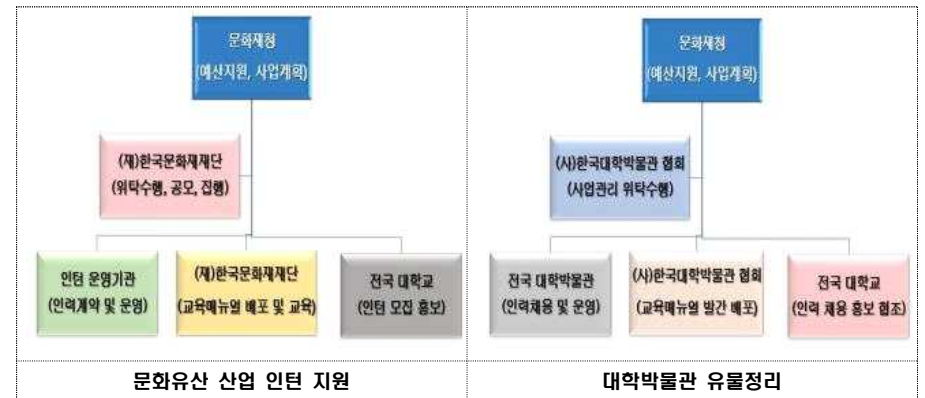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 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제공)
-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2항

□ '22년 소요예산 : 47억

- 문화유산 산업 인턴 지원 사업 : 24억(인턴수당, 교육 등 운영비)
- 대학박물관 유물 정리 : 23억(인건비, 교육 등 운영비)

□ 추진체계



## □ 추진일정

### ○ 문화유산 산업 인턴 지원 사업

구분	추진내용	일정	
'22	1/4 1월	문화유산 산업 인턴기관 공모·선정	'22. 1월
	2월	문화유산 산업 인턴 공개 모집	'22. 2월
	3월	인턴 운영기관별 인턴 배치	'22. 3월
	2/4 4월	인턴 교육(수시)	'22. 4월~
	3/4 8월	인턴기관별 모니터링	'22. 8월
	4/4 12월	인턴채용 성과보고 '23년 사업추진계획 수립, 위탁계약 체결	'22. 12월

### ○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구분	추진내용	일정	
'22	1/4 1월	'22년 사업계획 수립 및 위탁계약 체결	'22. 1월
	2월	협회·각 대학박물관 계약 체결 및 사업운영	'22. 2월~12월
	2/4 4월	관련 사업 직무교육 자료 배포(협회)	'22. 4월
	3/4 8월	전문교육 실시, 실적점검	'22. 7월
	4/4 10월	박물관별 현장점검 실시	'22. 10월
	12월	사업결과 보고	'22. 12월

## □ 홍보계획

- (문화유산 산업 인턴 지원) 채용 포털 및 산·학 연계를 통한 홍보 강화로 우수 청년 인턴 확보 및 기관 매칭 지원
- (대학박물관 미정리 유물 정리) 사업 성과에 대한 언론 보도, SNS를 통한 사업 홍보활동 강화

\* 보도자료 배포(연 4회), 문화재청 정책홍보 과제 선정('22.2월) 홍보 추진, 카드뉴스 제작('22.1월), 인턴 현장 인터뷰 동영상 제작('22.5월) 등 SNS, 유튜브 홍보)



## 3 혁신으로 발전하는 지역사회

### 3-1(3-6-1) 주민 주도 고도(古都) 문화재 지역의 합리적 보존

주관부서	고도보존육성과	관련 협업기관	지자체 문화유산 관련부서, 고도 문화유산 보존회 등
담당자	김용희 사무관	연락처	042-481-3104

## □ 추진배경

- 주민 주도 역사도시경관 조성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고도 이미지 찾기 정책 재구조화를 통해 보다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세계유산 고도 육성
  - 고도 지역은 삼국 왕도를 토대로 중세, 근현대까지 집적된 다양한 역사문화층 위에 생활공간이 공존,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특히 문화재 관련법으로 이중삼중 규제를 받는 고도 지역은 사유지 비율이 높아 주민의 적극적 참여·협력이 정책 성공의 열쇠
- \* 고도보존육성지구 사유지 비율 : 경주(669,019㎡, 64.8%), 공주(990,762㎡, 63.4%), 부여(821.143㎡, 65.5%), 익산(122,806㎡, 10%)

## □ 현황(문제점) 진단

- 점단위 중심의 경관 관리체계로는 고도 이미지 찾기 활성화 한계, 통합적·입체적 접근방식의 역사도시경관 보존육성체계로 전환 필요
  - 사업대상 한정(한옥 중심), 지원체계 다원화로 참여절차 불편, 점단위 중심의 사업방식 등으로 주민 참여율 저조
  - 물리적 경관개선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역사도시 향유사업 발굴 필요
- \* 15~21년 고도 이미지 찾기 경관개선 건수 : 한옥지원(313건), 가로경관개선(256건), 역사문화환경개선(73건)

□ **추진방향**

- 주민(주민협의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보존육성체계를 구축**, 역사도시경관 회복과 재생 전략에 따라 단계별 추진
  - (주민지원 강화) 한옥 중심에서 **근현대 건축자산까지 지원 대상 확대**, 지원금액 확대, 점단위에서 **역사공간 단위로 지원범위 확대**, 역사도시 **향유공간 조성 및 향유공간 프로그램 운영**
  - (지원체계 강화) 전통한옥을 건축할 경우, 예산범위에서 **발굴(지자체)~한옥지원(자문)~손실보상(유적 보존조치)~이주까지 원스톱 서비스**
  - (참여·협력 강화) 주민-전문가-지자체-중앙 간 협력을 토대로 고도별 **역사도시 통합경관계획 수립(경관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 등)**

□ **세부 추진사항**

- 역사공간(歷史空間) 단위, **역사도시경관 회복 사업** 추진
  - (선도사업) 응진백제 타임캡슐 대통사 역사유적공원 조성
    - \* 주민참여 기반 응진백제 왕도 핵심유적의 가치규명을 위해 면단위 역사공간 발굴(23필지)
    - \* 고도 사적유형별 분석 및 정비 모델 개발 용역결과 우수사례 접목(22년)
- 전통유산의 가치를 접목, **역사문화경관 재생 활성화**
  - 주민지원 사업(주거환경개선, 가로경관개선) 확대 및 지원기준 개선
  - 지자체 역사가로 재생 등 **역사문화경관 재생** 추진
- 국민참여형, 역사도시 향유공간 조성 및 향유프로그램 개발·운영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점단위) 한옥지원 313건, 가로경관 개선 256건, 역사문화환경개선 73건	○ (점단위) 근현대 건축자산 2건 한옥지원 353건, 가로경관개선 274건, 역사문화환경개선 79건
○ (공간단위) 역사도시경관회복 사업 발굴 0개소, 역사문화경관 재생 0개소	○ (공간단위) 역사도시경관회복 사업 발굴 1개소, 역사문화경관 재생 1개소
	○ 고도 보존육성 주민지원 조례 개정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고도보존육성 정책만족도(21년 80.9점)	○ 고도보존육성 정책만족도(22년 81.86점)
○ 고도지역 관광객 방문 추천지수(21년 630)	○ 고도지역 관광객 방문 추천지수(22년 66.15)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고도별(경주, 공주, 부여, 익산) 고도 보존육성 관련 조례 개정(22년)
- 고도별(경주, 공주, 부여, 익산) 통합경관가이드라인 마련(23년)

□ **'22년 소요예산**

-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42억원
- 고도 사적유형별 분석 및 정비 모델 개발 용역 2억원

□ **추진체계**

- 주민참여 활성화로 선순환 성과창출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주민참여 :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참여 제고
  - 지자체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지원 홍보 강화
  - 중앙부처 : 활성화 추진계획수립·시행, 예산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 **추진일정**

- 고도 이미지찾기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22년 2월)
- 고도별 고도 보존육성관련 조례 개정('22년 중)
- 역사공간 회복 및 역사공간 재생 사업 등 역점사업 발굴('22년 중)

□ **홍보계획**

- 고도 이미지 찾기 활성화 시행에 따른 주민 설명회('22년 상반기)
- 고도 이미지 찾기 활성화 추진계획 보도자료 배포('22년 상반기)
- 고도 이미지 찾기 성과 홍보 ('22년 하반기, 고도를 그리다)

**3-2(7-1-1) 백제문화권 지역사회 취약계층 문화유산 공감 확산**

주관부서	한국전통문화대 총무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관련 협업기관	부여군(가족행복과, 문화재과) 부여교육지원청 부여군수어통역센터
담당자	이부호 사무관 김한희 연구사	연락처	041-830-7220 041-830-5611

□ 추진배경

- (지역 공감) 지역사회 취약학생 대상 포용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교육 키트를 개발·배포하여 ESG(친환경, 사회공헌, 거버넌스) 운영 실천
- (수어 공감)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유산 향유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수어 해설”을 영상에 추가하여 장애인의 보통의 삶 추구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 현황(문제점) 진단

- (지역 공감)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활동 부족으로 인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교육결손 및 교육격차 확대
  - 정부에서는 교과보충 및 협력수업 확대 등 학습결손 회복, 상담·의료서비스 등 심리·정서 지원 등 특단의 노력중이나 역부족
  - \* 교육부는 코로나19 교육회복을 위하여 '21년 하반기 약 2,600억원 편성
- (수어 공감)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안 미흡

□ 추진방향

- (지역 공감) 전통문화를 테마로 DIY체험키트 패키지를 개발하여 대면활동 부족으로 인한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결손 치유 지원
- (수어 공감) 국민들에게 문화재 발굴조사는 지루하고 불편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어서, 조사의 과정을 주기적으로 공유

□ 세부 추진사항

- (지역 공감) 대학-지역-산업 간 공유·협력 및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전통문화 분야 체험놀이 DIY키트\*를 기획·개발 등 맞춤형 지역 혁신인재 집중 육성 및 전통문화 파생산업 활성화
  - 지역사회 유관기관(부여군, 부여교육지원청 등) 및 문화산업 연관업체 등 민·관·산·학·연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역 혁신·발전
  - \* (예시) 전통건축 목재퍼즐, 전통조경 테라리움, 전통매듭 팔찌, 보름달 무드등, 한지 크리스마스카드, 전통놀이 보드게임 등

< 전통문화 체험교육 DIY 놀이키트(예시) >



- (수어 공감) 백제 왕릉원 발굴조사 성과 「고분뉴스」 운영
  - 영상은 뉴스(앵커-리포터)의 보도 방식으로 제작 (6회 이상)
  - 영상 자막은 국문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도 함께 배치
  - 영상에는 전문 수어통역사를 섭외하여, 수어도 함께 송출
  - 영상의 주제는 발굴조사 현안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지역 공감)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결손 치유를 위한 전통문화 교육자료 미흡	○ (지역 공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전통문화 체험교육 DIY 놀이키트 제작·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여 소재 취약계층 초등생 100여명 등</li> </ul>
○ (수어 공감) 백제문화권 수어제작 미흡	○ (수어 공감) 백제문화권 발굴 수어영상 6건 이상 제작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지역 공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정서, 사회성 등 취약학생 교육 결손 심화	○ (지역 공감) 전통문화 학습제공으로 선제적 일상회복 지원 및 산업계 활성화
○ (수어 공감) 제작된 영상은 전문가 집단 혹은 일반 국민이 주로 향유하고 있음. 취약계층, 특히 농인의 경우 영상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어려움	○ (수어 공감) 수어영상을 유튜브 게시 및 지자체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재 홍보·활용 추진. <b>최소 예산 대비 최대 효과</b> 창출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지역 공감) 확진자 폭증, 신종변이 발생 등으로 수요변동 심화하 내 감염병 확산 우려 확대
- (수어 공감) 문화재 발굴조사 정보를 농인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안내방식 미흡

□ '22년 소요예산

- (지역 공감) 체험키트 등 0.1억, (수어 공감) 영상 제작 등 0.2억

□ 추진체계

- (전통대 /부여문화재연구소) 체험 DIY키트 기획·개발 / 사업기획
- (부여군) DIY키트 제작 지원 및 업체 연계 / 소외계층 연결
- (부여교육청) 취약학생 현황 파악 및 DIY놀이키트 제작 자문
- (부여군 수어통역센터) 영상 통역, 소외계층 연결 등

□ 추진일정

- (지역 공감) 유관기관(부여군, 교육청 등) 업무협의('22.3월)
- 전통문화 체험교육 놀이키트 기획·개발, 배포('22.6~10월)
- (수어영상) 문화유산 뉴스 영상 공개('22.3~8월)

□ 홍보계획

- 유튜브, SNS 콘텐츠 제작·배포 등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연중)
- 전통놀이 체험수기 시상 및 보도자료 배포('22.10월)

4 협업이 일상이 되는 문화 조성

4-1(4-3-1) 한-이집트 문화유산 보존 협업 국제 네트워크 선도

주관부서	국제협력과	관련 협업기관	외교부, 이집트 관광유물부(SCA) 주이집트대한민국대사관 등
담당자	공달용 연구관	연락처	042-481-4731

□ 추진배경

- 정부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이집트 등 중점협력 국가 정책 추진전략 마련 필요성 대두
  - 신규 중점협력국인 이집트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및 성과 도출 추진
- 국방부·방위사업청의 對이집트 방산협력\*을 위한 한-이집트 문화유산 협력 지원 요청
  - \* 방위사업청장 對이집트 방산협력 지원 관련 문화재청장 면담('21.6.) 및 국방부장관 이집트 대통령 면담 시 이집트 문화유산분야 협력 지원 요청('21.8.)

□ 현황(문제점) 진단

- (전문가 의견) 인류문명 발생지이자 그리스·로마·이슬람 문명이 교차점인 이집트는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문화유산 교류협력 협의 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양국 간 문화유산분야 협력 체결 시, 국익 상승 등 파급효과 매우 큼
  - 중동·아프리카 특유의 행정처리 및 의사결정 지연 등 협의 난항
  - \* 이집트 문화유산 교류협력사업 전문가 자문 실시(서울대 유성환교수, '21.9.)
- (교류협력현황)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이 현재 對이집트 문화유산 협력 사업(발굴·보존·복원 등)\* 추진 중임
  -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對이집트 문화유산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 협력사업(발굴·보존·복원 등)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 (미국) 이집트 문화유산 기록화 등 지원, (프랑스) 중요 고고학적지 발굴, 보존, (EU) 카이로박물관 리모델링, (일본) 이집트 그랜드박물관 건립, 문화재 복원 전문가 양성

## □ 추진방향

- 이집트는 문화유산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큰 만큼 「한-이집트 문화유산 교류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
  - 체결주체 : (韓)문화재청-(埃)국가최고유물위원회\*
  - \* 국가유물최고위원회(SCA): 이집트 관광유물부 소속 차관급 기관으로 문화유산 업무 담당
- 정부 대외 정책 성과 배가, 문화외교력 확대 등 상생의 국익 실현을 위해 외교부, 이집트 관광유물부 등 관계기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문화유산 보수·복원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우수성을 이집트 및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 및 지정학적 문화외교력 강화 계기 마련
  - \* 한-이집트 문화유산 포럼(협의체) 구성, 운영 / 온-오프라인 협의체

## □ 세부 추진사항

- (MOU체결) 한-이집트 문화유산분야 첫 「문화유산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 (추진일정) 대통령 이집트 국빈방문('22.1.19~21.) 시 정상외교 성과 포함
- (포럼구성·운영) 한-이집트 문화유산 교류협력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이집트 문화유산 디지털 포럼」 운영
  - 한-이집트 합동실무단 구성(연중), 고위급 회담(4월), 국제포럼(상반기) 추진

##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문화유산분야 국제개발협력 대상국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심(9개국)	○ 대상국가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확대 (+이집트, 10개국)
○ 對이집트 문화유산분야 협력 부재	○ 對이집트 문화유산 교류협력 MOU체결을 통한 문화유산 교류협력 관계구축 - 협업 네트워크(포럼 등) 운영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실질적 국민 체감, 공감·지지 확보 미흡	○ 실질적 사업추진을 통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 이집트 라메세움신전 복원 등 추진
	○ 對이집트 문화유산외교력 강화 및 국격 제고

##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코로나19 및 중동·아프리카 국제 정세 불안정 등 글로벌 현안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한계
  - ▶ (극복방안) 글로벌 현안에 선도적 대응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협의체' 운영
- 중동·아프리카 특유의 행정처리 및 의사결정 지연 등 협의 난항
  - ▶ (극복방안) 외교부, 주이집트대한민국대사관, 주한이집트대사관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 협력관계 심화 기반 조성

##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추진 중(의안번호 제2110805호)
  -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 추가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 사항' 추가

- 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제3항 신설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및 사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재교류진흥원을 둘 수 있다.'

## □ '22년 소요예산

- 협업 네트워크 운영 : 1억원(국제포럼 운영, 양국 간 인적교류 등)
- 실무회의, 고위급 회담 등 : 0.1억원

## □ 추진체계

- 협업 기관(부처별) 역할

구분	소속	주요 담당업무
정부 (부처)	문화재청(국제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이집트 국제교류협력 계획수립, 총괄</li> <li>■ 이집트 관광유물부·외교부 등 관계기관 대응</li> </ul>
	이집트 관광유물부 (유물최고위원회,S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집트 문화유산 국제협력 총괄</li> <li>■ 이집트 내 협업네트워크 관리</li> </ul>
	주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이집트 협업네트워크 지원</li> <li>■ 이집트 외교부 협의, 대응</li> </ul>
	외교부 중동1과/개발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협력사업 발굴, 지원 등 협조</li> </ul>



○ 한-이집트 문화유산 포럼 추진 T/F 구성(안)

구분	소속/직위	주요 담당업무
총괄	문화재청 국제협력과장 (디지털문화유산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이집트 문화유산 교류협력 네트워크 총괄</li> <li>이집트 관광유물부·외교부 등 관계기관 대응</li> <li>후속 실행과제 발굴, 인적교류 수행 등</li> </ul>
TF구성원	디지털문화유산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유산 디지털 국제포럼 운영</li> <li>국제개발협력사업(디지털분야) 참여기관</li> </ul>
	전통문화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li> <li>국내외 포럼 참석자 섭외, 언론대응 등</li> </ul>
	국립문화재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개발협력사업(문화재복원) 참여기관</li> </ul>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분야 업무지원 등</li> </ul>

○ T/F 기능 및 역할

- 한-이집트 문화유산 교류협력 사업 점검 및 협업세부과제 논의
- 협업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 조사 및 조치

□ 추진일정

- ('21.1.) 한-이집트 문화유산분야 업무협약 체결
- ('21.2.) 문화유산 교류협력 회의(포럼운영, 고위급 회담 일정 등 논의)
- ('21.4.) 한-이집트 문화유산 고위급 및 실무자 회의(서울/대전)
- ('21.상반기) 한-이집트 문화유산 국제포럼 개최

□ 홍보계획

- (한-이집트 문화유산 MOU) 언론보도, 기고, SNS 등('22.1월)
- (포럼운영) 언론홍보자료 배포, 카드뉴스 제작, SNS 등

**세계일보**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024면 문화

**붕괴한 이집트 신전 탐문 한국이 되살린다**

양국 문화유산 교류·협력 MOU  
문화재청, 라메세움 해체·복원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이집트 최대 규모 신전인 룩소르 라메세움의 붕괴된 탐문을 한국 정부가 해체·복원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국가유물최고위

김현모 문화재청장(왼쪽)과 모스타파 와 지리 국가유물최고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문화유산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4-2(4-3)-2) 범정부차원의 협업을 통한 세계유산 역사왜곡 대응**

주관부서	세계유산정책과	관련 협업기관	외교부 유네스코과 문체부 국제문화과 등
담당자	박지영 사무관	연락처	042-481-4617

□ 추진배경

- 세계유산은 국가의 문화정치적 입장과 관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세계유산을 보유하는 것은 국가의 국제 문화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준임
- 첨예한 문화 경쟁 및 이해가 대립되는 국제관계 속에서 각 국가들은 유네스코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유산에 대한 역사 왜곡으로 문화정체성 위협 증가
  - \* 일본 메이지산업혁명유산(2015), 터키 하기아 소피아 성당, 아프리카 식민 관련 유산 등

□ 현황(문제점) 진단

- 최근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역사 문제 등 국가 간 갈등 증가
  - 일본의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유산'이 갈등 유산의 대표적 사례로 등재 시('15년) 권고사항인 국제약속\* 미이행
    - \* 일본은 2015년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시 대상기간을 메이지 시대(1850~1910년)로 한정하여 강제노역 논란을 회피하였으나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마련을 권고
  - 일본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적 사실 부인
    - \* 사도광산 등재 대상기간을 에도시대(1603~1867년)로 한정한 것은 강제노역 사실 회피

□ 추진방향

- 주변국의 문화공정, 세계유산 신규 등재 경쟁 심화와 세계유산 역사 왜곡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협업 및 대응추진
  - \* 최근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22) 시 역사왜곡의 문제점과 일본 세계유산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국제적 약속 미이행('21)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요구

## □ 세부 추진사항

- 시기·상황별 대응방안 수립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세계유산 역사왜곡 대응
  - 일본이 군함도 관련 등재 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과 사도광산의 세계유산등재 추진의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여론을 조성하되, 특히 전문가 여론조성에 집중

구분		등재일정에 따른 추진 내용
1단계	세계유산센터 등재신청서 제출 및 완성도 검사 이후 자료 분석 ('22.1~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UV분석)</b>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분석을 통한 세계유산 등재의 문제점 도출</li> <li>○ <b>(전문가 기고)</b> 관련 전문가 기고를 통한 세계유산 등재의 문제점 제기 등('22.1.27)</li> <li>○ <b>(민간단체 협력 및 국내외 홍보)</b>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를 통한 국제사회에 상황알림 및 주의환기 ※ 사도광산의 세계유산등재 문제점을 범세계적인 이슈로 확대하는 '반크 글로벌 캠페인 추진(글로벌 홍보 5대 대응)</li> </ul>
2단계	등재신청서에 대한 자문기구 (ICOMOS) 심사 대응 ('22.4월 ~ '23.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학술행사)</b> 전문가 학술회의 및 국제 세미나 등 개최</li> <li>○ <b>(국내외 홍보)</b> 세계유산 자문기구 및 각국 세계유산위원회 참석 전문가 대상 알리미자료 배포 등 전문가들의 인식저변 확대 ※ <b>(이행보고서 분석)</b>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사설' 이행보고서 ('22.12월) 분석 및 대응('22.12월~'23.2월)</li> </ul>
3단계	자문기구(ICOMOS) 등재심사 결과 공개 후('23.4~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자문기구 권고의견 분석 및 전략마련)</b> 세계유산위원회국 설득 전략 개발, 중점대응시기로서 외교부 등 유관부처 협력을 통해 대응전략 마련</li> <li>○ <b>(국내외 홍보)</b> 갈등 세계유산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인식 제고(국제 세미나 개최)</li> </ul>
4단계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23.6~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지 대응)</b> 현장 지지도교섭 실시 및 세계유산위원회위원회국 설득</li> <li>○ <b>(위원회장 내 행사개최)</b> 세계유산위원회 부대행사 개최(갈등 세계유산 해석 관심 촉구)</li> </ul>

##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 일본의 세계유산 역사왜곡에 적극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어려운 환경 조성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코로나19로 현지교섭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의 세계유산 역사왜곡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데 한계	○ 일본의 세계유산 역사왜곡에 대응하여 단계별 상황에 맞게 부처 협업 실시로 국제적 지지 확보

## □ 과제 추진 상 장애요인

- 코로나19로 현지교섭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지지 견인 필요
  - 세계유산 역사왜곡(군함도, 사도광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명시적 확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대응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임

##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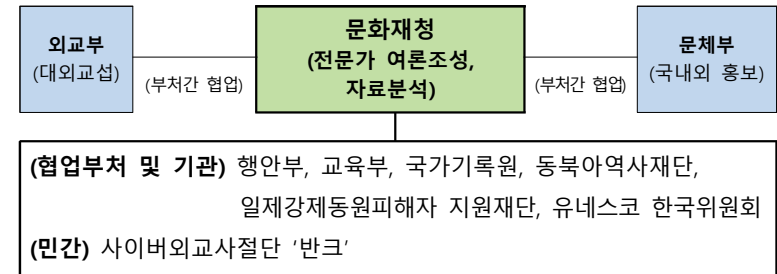
- 해당없음

## □ '22년 소요예산

- 세계유산 전문가 국제회의 참석 및 세계유산위원회 활동 지원(0.5억원)

## □ 추진체계

-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협업 체계



□ 추진일정

구분	내용	비고
1단계	세계유산센터 등재신청서 제출 및 완성도 검사 이후 자료 분석('22.1~4월)	
2단계	등재신청서에 대한 자문기구(ICOMOS) 심사 대응 ('22.4월 ~ '23.3월)	
3단계	자문기구(ICOMOS) 등재심사 결과 공개 후('23.4~5월)	
4단계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23.6~7월)	

□ 홍보계획

- (문화재청) 주변국의 문화공정, 세계유산 역사 왜곡 공론화 대응
  - 기관장, 전문가 기고(일간지, 영자지) 및 학술대회 개최
  - 온라인 세미나 개최(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
  -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의 문제점을 범세계적인 이슈로 확대하는 글로벌 홍보 5대 프로젝트 실시(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 상황별 보도자료 배포
- ※ (문체부, 유네스코한위 등) 일본의 왜곡 전시를 알리는 동영상, 카드뉴스, 해외언론 기고, 국제포럼, 외신기자 간담회 등 추진

<p><b>한겨레</b> 일본 사도광산은 세계유산이 될 수 없다</p>  <p>2022년 1월 27일 목요일 04면 오라니판</p>	<p><b>경향신문</b> "일 정부, 강점기 뻥 사도광산 등재 품수... 강제동원 은폐하려다 인정한 꼴"</p>  <p>2022년 2월 17일 목요일 020면 문화</p>
<p>전문가(문화재위원) 기고문('22.1.27.)</p>	<p>역사왜곡 관련 전문가 학술회의 객관적 자료지원('22.1.17.)</p>

4-3(4-4-1) 문화재 주변 산불 재난대응 상황업무 협력강화

주관부서	안전기준과	관련 협업기관	산림청
담당자	서민석 연구관	연락처	042-481-4820

□ 추진배경

- 산불상황 발생 시 인근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고, 화재 확산 시 신속한 상황판단 및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협조 강화
- 문화재 산불 초동대응 태세 강화 및 문화재 안전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관 간 업무 협력체계 확립

□ 현황(문제점) 진단

- 최근 10년간 문화재 발생 화재는 25건으로 그 중 6건이 '21년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음
- 산불은 최근 10년간 474건(산림 1,119ha 피해)로 발생하며 주로 봄철에 집중적(311건, 67%)으로 발생하고 있음
- 연중 고온현상, 낮은 강수량, 건조일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연중 화재가 발생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에 대한 재난 대비태세 마련이 필요함

★ 산불발생 현황

- 10년 평균 : 발생 474건, 산림 1,119.48ha 피해
- 2021년도 : 발생 349건, 산림 761.99a 피해

발생건수 473.7건  
(1,119.48ha 피해)

10년 평균(11~20)

발생건수 349건  
(761.99ha 피해)

2021년도

★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 10년 평균 : 발생 280.5건, 산림 583.08ha 피해
- 2021년도 : 발생 238건, 산림 707.31ha 피해

발생건수 280.5건  
(583.08ha손실)

10년 평균(11~20)

발생건수 238건  
(707.31ha손실)

2021년도


## □ 추진방향

- 양 기관 상황시스템 정보 공유 및 방재자원 협조체계 강화
  - 문화재방재정보통합시스템-산불상황관제시스템 정보공유
- 주기적 실무협의회 개최로 지속적 협조체계 확립
  - 산불 및 각종 재난대응(산사태, 재선충)에도 신속한 협조 유지

문화재청	산림청
 <p>문화재방재정보통합시스템(<a href="http://drm.cha.go.kr">http://drm.cha.go.kr</a>) 문화재 위치 및 (보호)구역, 방재설비현황 등 정보제공</p>	 <p>산불 상황관제시스템(<a href="https://map.forest.go.kr/portalo">https://map.forest.go.kr/portalo</a>) 실시간 산불상황 및 방재자원 투입현황 등 정보제공</p>

## □ 세부 추진사항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및 방재정보통합시스템 문화재정보 제공
  -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내에 문화재정보 탑재
  - 산불 발생 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탑재된 문화재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신속한 상황판단 능력 구비
- 양 기관 상황시스템 연계로 재난상황 초동대처 능력 함양
  - 상호연계 : 문화재방재정보통합시스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재난상황 발생 실시간 접수 및 상황판단 대응태세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간 산불감시시스템인 산림청 산불 상황관제시스템에 문화재 정보 탑재시 발화지 주변 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이 확인 될 경우 즉시 문화재청에 상황전파 가능</li> <li>▶ 신속한 상황전파로 문화재보호를 위한 화재 초기대응 실시</li> </ul>
---	---

##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내에 문화재 정보 현행화 미비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GIS) 및 방재정보 통합시스템 내 문화재 및 방재정보 제공
○ 산불 재난 상황시 상황발생 신고 공유 체계 부재	○ 양기관 상황시스템 연계로 재난상황 초동대처 능력 함양

###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산림청 산불상황 및 문화재 정보시스템이 이원화 되어 있어 비효율적인 산불 상황업무 및 초기 대응 지연	○ 시스템이 연계됨에 따라 산불상황 및 문화재정보가 일괄 확인되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산불상황업무 가능
	○ 문화재 주변 화재 발생 시 신속대응태세 확립

##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기 개발되어 있는 양 기관의 상황관리시스템이 연계 가능한가에 대한 호환성 검사 선행 필요
  - 시스템 호환성 유무에 따라 연계가능 정보의 양적, 질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 고려

##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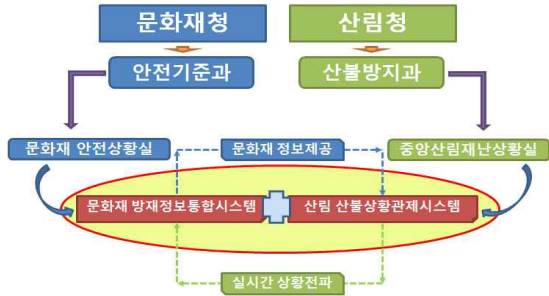
-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제2장 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제4조~제8조)
- 「문화재청 산불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 비상근무체계(상황관리 및 안전상황실 구성·운영) 실무매뉴얼

## □ '22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체계

- (문화재청) 양 기관 상황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문화재 방재설비 정보 등 현행화 및 문화재 정보 공유
-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탑재된 문화재정보를 기반으로 산불발생 시 반경 내 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실시간 상황 신속전파



□ 추진일정

- ('21. 2.)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GIS) 내 문화재 정보 공유
- ('21. 3.) 문화재 주변 산불예방 홍보 활동 추진
- ('21. 4.) 문화재 방재정보통합시스템 내 방재인프라 정보 공유
- ('21. 5~9.) 양 기관 상황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정보기술 협력
- ('21. 수시) 각종 재난 대응을 위한 주기적 실무협의회 개최

□ 홍보계획

- 봄·가을 산불조심기간 문화재 화재예방 활동 홍보(연중)

- 문화재청 홈페이지 배너 활용 온라인 홍보
- 문화재 주변(사찰 등) 산불, 화재 안전수칙 현수막 제작 및 홍보



문화재보호 현수막(경부대전청사, '22.2월)

- 타부처 등과의 협업성과 보도자료 배포(연중) 등

4-4(4-7-1) 문화유산 협업 인센티브 내실화

주관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관련 협업기관	행안부(협업정책과) 등
담당자	여규철 서기관	연락처	042-481-4855

□ 추진배경

- 신종 전염병 등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문제 등에 협업을 통해 **범정부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 필요
  - \* 「행정절차법」에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의무화 등 근거 신설('22.7.11.시행)

□ 현황(문제점) 진단

- 협업이 업무의 당연한 과정이 되는 것에 대한 구성원의 인지 미흡
  - 평가에 대한 부서(기관)간의 일부 경쟁심으로 협업 저하 우려 상존

□ 추진방향

- (자율 기반) 협업이 일상화·내재화되는 조직문화 정착
- (시스템 기반) 신기술 적용·도입을 통한 협업시스템 고도화
- (사회적 현안) 문화유산 관련 사회문제를 협업과제로 발굴·해결

□ 세부 추진사항

- 과제발굴에서 제도·시스템 정비까지 추진
  - 협업 매니저 등을 통한 부서간 협업 활성화 기반 강화
    - \* 기관 주관 3건 및 협업이음터 중점과제 10건 내외 지속 관리
- 협업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점) 노력 강화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가점 필수부여
- 정부간 협업과제 발굴·추진으로 협업정원 증원, 재정지원 추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협업우수자 포상 명시 불분명	○ 협업우수자 포상 명시 명확화 - 혁신행정인 중 협업 30% 이상 선발
○ 협업이음터 과제 5건 미만	○ 협업이음터 과제 5건 이상 발굴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부서간 경쟁으로 협업 어려움 존재	○ 협업성과 공유로 칸막이 제거 효과 제고
○ 협업이음 부서평가 반영 미미	○ 타 부처와도 협업이음 활성화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협업이음매니저(기관별 협업 담당 실무자)의 업무 과중 우려  
→ 국, 소속기관별 협업이음매니저를 분임하여 독려 필요
- 한정된 포상예산으로 협업우수자들에게 충분한 포상금 지급 한계  
→ 우수자에게 포상휴가, 포상시 여비지급 등 타 재원 발굴 지원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문화재청 인사규정에 '협업' 우수자에게 실적가점을 주도록 규정 되어 있으므로 이를 현실 적용토록 관계부서와 지속 협의

□ '22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포상금 별도)

□ 추진일정

- 분기별 협업우수자 발굴(3, 6, 9, 11월) 및 지원  
- 우수 주관부서, 협조부서 포상금 지급, 우수자 포상휴가 등 지원

□ 홍보계획

- 분기별 협업혁신인(협업인)에 대한 분기별 언론홍보  
- 기관장 동정, 협업 우수내용(우수자 실명 등) 보도자료 배포

## 5 디지털 서비스로의 혁신적 전환

### 5-1(5-3-1) 첨단기술 기반의 문화유산 3차원 정보 서비스

주관부서	디지털문화유산팀	관련 협업기관	민간업체 (게임사, 영화제작사 등)
담당자	최연규 사무관	연락처	042-481-4752

####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진입으로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 및 가치창출의 원천이자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자원으로 대두
- 온라인 디지털 기술발전 가속화로 인한 문화유산 향유방식 변화에 따라 메타버스 등 신기술 대응 및 민간협력 등을 통한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보급 생태계 강화 필요

#### □ 현황(문제점) 진단

-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3차원 데이터 등)에 대한 민간업체(게임사, 영화제작사 등) 활용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지속 증가
  - \*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요청·제공 기관 : '20년 28기관 → '21년 50개 기관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제도·시스템 미비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오프라인 활용(나눔방, 이동형체험관 등)은 활발하나 온라인 개방·활용을 위한 제도·지침 및 온라인 플랫폼 정비·확대 필요

#### □ 추진방향

-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디지털문화유산 원천 콘텐츠 확대 구축
- 민간업체와 협력한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활용 확대
- 데이터 유통체계(제도·지침, 플랫폼 구축 등) 마련을 통한 확대보급 및 활용 극대화

#### □ 세부 추진사항

- 디지털문화유산 원천 콘텐츠 지속 확대 구축
  - 문화유산 3차원 DB 및 기록정보자원을 관리·활용을 위한 데이터 세트 구축
    - \* 3차원 DB : ('21~'22년) 경상·제주권역 1,460건 구축
    - \* 데이터 세트 : ('21~'22년)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등 누적 60만건
- 민간업체 협력을 통한 문화유산 콘텐츠 제공·활용 우선 추진
  - 민간 메타버스 기업 및 영화제작사 등과 협력하여 문화유산 원천 콘텐츠 자원이 다양한 환경에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 보급처 다양화 및 활용·확산 극대화를 위한 유통체계 확립
  - 민간·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 가능토록 데이터 제공·활용 지침 마련 및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구축

####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데이터 제공·수령을 위한 행정비용 - 처리기간 : 7일 ※ 행정처리(1~2일), 복사(2~3일), 제공(2일)	○ 데이터 제공 및 다운로드 - 처리기간 : 실시간 ※ 온라인 조회 및 실시간 다운로드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오프라인 공간에 한정하여 디지털문화유산 체험	○ 기 제공 서비스 뿐만 아니라 게임, 영화 등 민간 기업의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유산 체험 및 홍보 가능
○ 문화유산 관련 디지털 자료를 웹사이트를 통해 단순 열람하는 수준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하여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
○ 문화유산 데이터 확보를 위해 직접 촬영 및 스캔 작업 실시 - 건당 약 1천만원, 7일 소요	○ 문화유산 3차원 원천데이터 다운로드를 통해 즉시 활용(활용업체) - 데이터 생산을 위한 소요비용 절감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민간기관에서 데이터 활용을 위해 필요로 하는 포맷이 다양함
- 제공 데이터의 2차·3차 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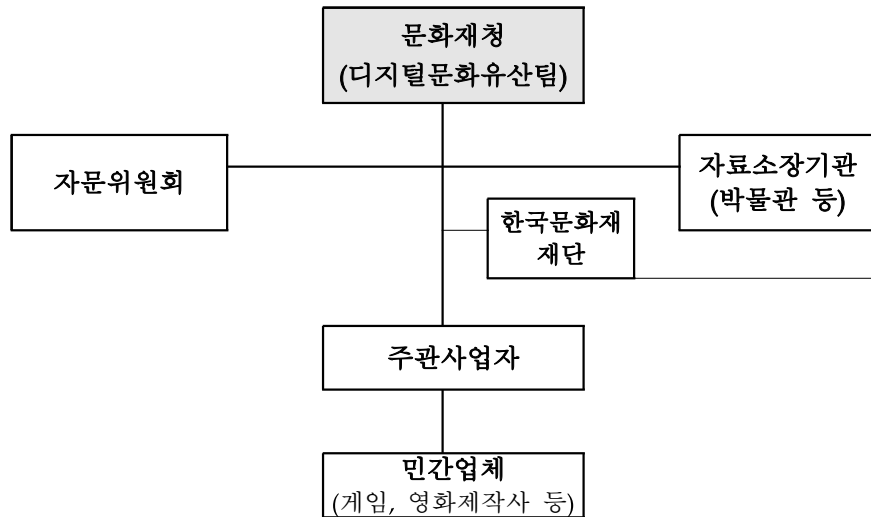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문화유산 3차원 데이터 제공 및 활용 규정 제정
  - 문화유산 원천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및 제공기준, 절차, 제약사항 등에 대한 규정 제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토록 관련 규정 제정

□ '22년 소요예산

- 문화유산 원천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세트 제작 217억
- 문화유산 콘텐츠 개방 플랫폼 구축 27억

□ 추진체계



기관명	역할
문화재청 (디지털문화유산팀)	○ 기본계획 작성, 사업계획 수립 및 과업내용 작성 ○ 과제 수행·관리 감독 및 검사
자문위원회	○ 전문가 자문 및 데이터 검증지원
자료소장기관 (박물관 등)	○ 문화유산 원천데이터 구축 관련 자료 제공·지원 ○ 소관 자료 기술자문 등
한국문화재단	○ 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 민간기관 협력 및 실행 지원
주관사업자	○ 관련 자료 수집 섭외 및 데이터 제작 ○ 데이터 제공 및 활용 기술 지원
민간업체	○ 제공 데이터 활용 및 서비스

□ 추진일정

- ('22.3월) 문화유산 원천데이터 제공 및 활용 규정 제정
- ('22.3월) 메타버스 콘텐츠 업체 업무협의를
- ('22.4월) 메타버스 경진대회 개최
- ('22.4월)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 ('22.11월~12월)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3D 에셋 라이브러리 제작 및 개방 플랫폼 서비스 구축

□ 홍보계획

- 문화유산 원천데이터 콘텐츠 업무협약 보도자료 배포('22.4월)
- 문화유산 원천데이터 서비스 주요성과 보도('22.10월)



**5-2(5-3-2)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토지이용규제정보 제공방식 개선**

주관부서	디지털문화유산팀 (보존정책과 등)	관련 협업기관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노국환 사무관 (이희영 사무관 등)	연락처	042-481-4614

□ 추진배경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토지이용규제 투명화를 위해 근거법령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 내용 등을 토지이음을 통해 제공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우 문화재별로 행위제한을 고시함에 따라 토지이음을 통한 규제사항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한계 노출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현황(문제점)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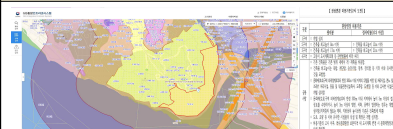

- 국토부-문화재청간 규제정보 설정 기준에 따른 차이점 존재
  -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형기반의 구역 설정  
※ 문화재 공간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정보 제공
  - **(국토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적정보 기반으로 정보제공  
※ 토지이음 시스템을 통하여 지번별 규제정보 제공

□ 추진방향

- 문화재 공간정보 시스템과 토지이음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지번 데이터를 활용 시스템 연계
-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와 협업을 통한 시스템 연계요건 정의 및 서비스 개시 시점 등 결정

□ 세부 추진사항

- 시스템 연계를 통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정보” 제공
  - ‘2022년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사업 과업으로 포함 추진  
\* ‘22년 1분기 발주, 6~7개월 사업진행 후 ‘22. 12월 완료예정

구분	문화재청	국토교통부
문화재 규제정보 확인 시스템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GIS) ( <a href="http://www.m.gis-heritage.go.kr">www.m.gis-heritage.go.kr</a>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토지이음) ( <a href="http://www.eum.go.kr">www.eum.go.kr</a> )
확인정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해당 유무 행위제한(허가사항, 허가대상행위) 허용가능 행위(허용가능한 건축행위 등 기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해당 유무 행위제한(허가사항, 허가대상행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국토부 토지이음 서비스를 통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사항 제공에 한계	○ 국토부 서비스와 문화재 공간정보 시스템 연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3,618건 정보 제공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토지이음 서비스 사용자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자세한 토지규제 정보 확인 시 불편	○ 토지이음 서비스와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 연계를 통한 규제정보 제공 일원화 - 민원 저감 예상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지번·지적데이터의 경우 대량데이터 및 잦은 변경으로 데이터 처리에 한계
  - **(지번 특수성)** 지번의 경우 분할, 합병, 이동 등 변경 가능성 존재  
\* 지번 데이터의 경우 3,900만건 이상의 대량데이터로 구성
  - **(지적도)** 지번 특수성을 반영한 전국 대상의 연속지적도 작성에 시간 소요  
\* 시군구 지적부서를 거쳐 국토정보이용체계(KRAS시스템) 반영 후 토지이음 적용

□ '22년 소요예산

- 2022년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GIS) 구축예산 3억

□ 추진일정 및 홍보계획

- '22년 문화재 공간정보(GIS) 활용체계 구축사업 착수('22.6월)
- 국토부 연계관련 세부업무협의 및 기능구현(~'22.10월)
- 토지이음 팝업 공지 또는 보도자료 작성('22.11월)  
\* 국토부와 협의 후 서비스 개시 시점에 따라 변경가능

## 6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선제적 제공

### 6-1(6-4-1) 국민의 품으로 더욱 다가서는 명승 백악산 탐방

주관부서	천연기념물과	관련 협업기관	경호처, 수방사, 서울시, 종로구, 한국문화재단 등
담당자	주중호 사무관	연락처	042-481-3165

#### □ 추진배경

- 도심에 위치한 유리한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68년 1.21사태 이후 일반인 접근이 전면·원천 차단되어 국민과의 소통에 제약이 되어왔음
- '06년 서울성곽의 북대문인 숙정문 개방 및 '07년 창의문에서 숙정문을 거쳐 와룡공원에 이르는 구간의 한양도성을 일반에 개방하면서 북악산 일대의 개방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 증대

#### □ 현황(문제점) 진단

- 도심에 위치한 유리한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특경정호지역으로서 그간 전면·원천 차단되어 국민과의 소통에 제약이 되어왔음
- 반세기 동안 단절된 북악산(명승 백악산)으로 인해 한북정맥이 단절되어 왔고, 국민의 자연유산 및 역사문화유산 향유기회 차단
  - \* 2020년 11월 한양도성~스카이웨이 숲길을 군 순찰로를 활용하여 탐방하는 1단계 개방 실시로, 많은 탐방객 방문('20.11.~'21.9. 24만여 명 방문)

#### □ 추진방향

- 청와대 방호를 보장하며 자연유산 북악산(명승 백악산) 시민개방 추진
  - 백제시대 이후 조선까지 이어오며 백악산을 중심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가 구현된 역사·문화적 가치의 재발굴
  - 백악산의 바위·계류·숲 등 아름다운 자연유산과 절터·각자 등 많은 문화유산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탐방과 휴식의 공간으로 제공

- 한양도성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여건을 조성하여 역사문화공간으로 회복하고, 자연유산 명승의 시민향유권 높임

#### □ 세부 추진사항

-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 북악산(명승 백악산) 개방 준비 점검 및 개방계획 협의
- 백악산 역사문화자원의 디지털(AR·VR) 자원화 등 콘텐츠 마련
  - 학술 지표조사를 통한 지정·비지정 자연·문화유산 이야기 발굴 및 디지털(AR·VR) 콘텐츠 마련
    - \* 문화유산 해설, 안내시설 정비, AR·VR 모바일 개설 등
- 방호와 탐방안전 확보를 위한 탐방·안내체계 구축
  - 탐방로·안내소 등 설치, 미관저해 군사시설 이설 및 철거 군부대 협조
- 시민안전 및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시스템 구축
  - 산불소화시설 및 산불진화헬기, 진화대원 증원 등 산림청 협조
    - \* 수막타워 및 옥외소화전 설치, 산불헬기 배정, 특수진화대 배치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악산을 한양도성 인근으로만 접근하여 관람</li> <li>○ 안내판 등 오프라인 해설체계 관람</li> <li>○ 관람로변 철책 및 군사시설물에 따른 위화감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양도성 내외부 및 북악산 전역을 관람할 수 있는 향유기회 제공</li> <li>○ 역사자원 등을 활용한 디지털(AR·VR 등) 모바일 안내·해설체계 마련으로 다양한 콘텐츠 관람 가능</li> <li>○ 관람로변 군부대 철책 철거를 통한 자연성 회복 및 쾌적한 관람 가능</li> </ul>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북악산 안내소 5개소를 통해 1년간 약27만명의 시민이 탐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청동 안내소 추가 개설 및 북악산 내부(청와대 북측) 전면 개방에 따라 약 50만명 이상의 시민이 탐방할 것으로 기대</li> </ul>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청와대 방호 및 수도 방위를 위한 미관 저해 시설물 처리 협의
  - 북악산 시민 개방 탐방로 변에 미관을 저해하고 관람객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시설물 정비 및 철거 필요성 제기와 북악산 전면 개방에 따른 경계력 강화를 위한 경계 시설물 설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충돌하며 문제점 발생
  - \*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수방사 경계 철책 철거·정비 협의 및 추가 경계 시설 설치 위치 등 협의를 통한 현상변경 허가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대처방안 마련 필요
  -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개방 시점에 개방행사 개최여부 미정 및 전자식게이트 설치 등을 통한 총 관람인원 조정방안 등 검토 필요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사항 없음

□ '22년 소요예산

- 탐방로 정비 40억원, 안내소 설치 2.8억원, 수목정비 2억원

- 백악산 일원 역사문화 이야기자원 발굴 및 AR·VR 콘텐츠 기획 0.6억원
- 한양도성·백악산 개방 운영 및 연주회 등 행사 14억원

□ 추진체계

- 협업 기관(부처별) 역할

구분	소속	주요 담당업무
정부 (부처)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기념물과) 북악산 개방 총괄 담당, 탐방 및 안내시설 설치 지원 등</li> <li>■ (활용정책과) 한국문화재단의 안내소 운영·관리 등에 대한 총괄 담당</li> <li>■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지표조사 등 역사문화자원 조사</li> </ul>
	대통령경호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경비지역 보안</li> </ul>
	수도방위사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검토, 현장지원, 철책 정비</li> </ul>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안전 및 산불예방</li> </ul>
자치단체	서울시, 종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방로 정비, 안내시설 설치 등</li> </ul>
민간기관	한국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내소 운영 및 관리</li> <li>■ 봄·가을철 연주회 등 행사 개최</li> </ul>
	SK텔레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문화자원 디지털콘텐츠(AR·VR) 개발</li> </ul>

□ 추진일정

- ('22.1~4월) 탐방로 정비 및 안내시설 설치 등 개방 준비
  - \* '22.3월 전문가 및 관계기관 합동 사전점검 실시(코로나19 등 여건에 따라 변동)
- ('22.5월~) 북악산(명승 백악산) 전면 개방 및 홍보
  - \* '22.4월 또는 5월 명승 개방 기념행사 개최(코로나19 등 여건에 따라 변동)

□ 홍보계획

- 북악산(명승 백악산) 전면 개방 시기에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단 팸투어 등 언론홍보와 카드뉴스 제작 등 온라인 홍보 추진
  - \* 개방행사 개최 시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간담회 개최 등 언론홍보 추진
- 한국문화재단에서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등 SNS 홍보 지속 추진

**6-3(6-4)-3 문화재지정서를 품격이 더하는 전통한지로 개선**

주관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유형과, 근대과, 고박 전시홍보과, 복원연구실)	관련 협업기관	행안부(협업정책과) 등
담당자	여규철 서기관 (김은영연구관, 김수현사무관 임경희연구관, 정선화연구사)	연락처	042-481-4855

□ 추진배경

- 최근 이탈리아, 프랑스 문화기관이 문화재 보수복원용 재료로 한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전통한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단’ 이 발족되는 등 한지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큰 증가
- 이에 문화재청에서 국보·보물 등 지정서를 전통방식으로 생산된 한지로 제작·발급하여 한지산업을 활성화하고 문화재 소유자에게 품격과 가치를 부여할 필요

□ 현황(문제점) 진단

- 수십년간 타부처 상장형태와 유사한 문화재지정서만 발급하여 전통 문화 관장부처로서의 특이점이 없다는 지적
  - 2013년에 문화재지정서를 족자형태로 추진한 바 있으나 불편함 (장기간의 배접시간, 비정기적 서예가 의뢰)으로 지속성 결여

□ 추진방향

- (디자인)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여 고품격의 디자인 적용
    - 스토리와 전통이 있는 문화재청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 지정서의 의미와 소장가치를 높이고 한국 공예의 감성으로 ‘문화재 지정서 보관함’의 기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 (재질) 최우수 한지이면서 인쇄 및 보관이 용이한 한지 선택
    - 정부포상 증서용 전통 한지 평가(행정안전부)에 상회하는 전통 한지
- ※ 신규 한지장(2021.7.28.) : 김삼식(경북 문경), 신현세(경남 의령), 안치용(충북 괴산)

□ 세부 추진사항

- 문화재 지정서·등록증 서식(5종) 개정
  - 국보, 보물·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 국보지정서 부록, 보물·민속 문화재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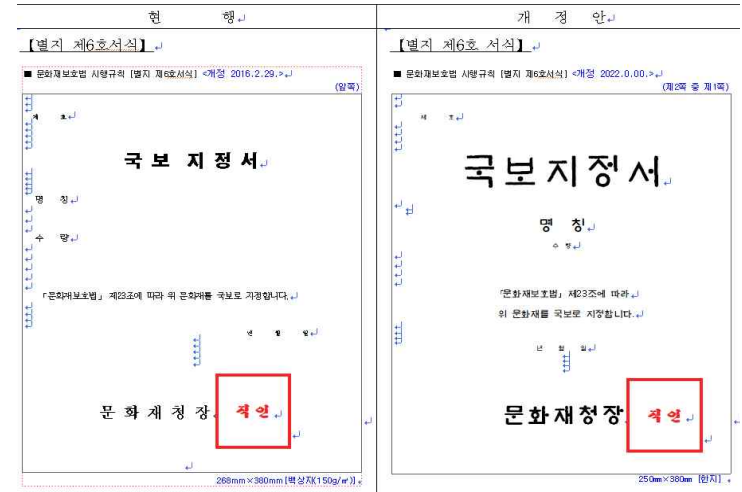
<지정서 서식 중 ‘주요변경 사항’>

- (재질) 백상지 → 한지

- (크기)	국 보	268mm×380mm	→	250mm×380mm
	보 물	235mm×290mm		

- (서체) 견고딕 → 훈민정음체 등

- (표기) 지정번호 → 발급번호(예시 : 제2022-001호)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수십년간 사용된 지정서 서식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개정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타부처와 유사한 지정서 서식, 품질	○ 전통한지 활성화 기여 ○ 문화재지정서와 부속함의 디자인 개선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인간문화재 장인들의 작업 특성상 안정적 공급 확보 필요  
→ 지속적 추진을 위한 '한국문화재단'의 상품화 필요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서식개정 ('22.6월)  
-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3월), 규제심사 등(~5월), 시행(6월)

□ '22년 소요예산

- 지정서 및 보관함 신규발급시 적용 0.5억(부서별 분담)

□ 추진일정

- 개정 서식안 확정(2월)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6월)

□ 홍보계획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완료시 보도(상반기)

**6-3(6-4)-3 21세기 해양강국, 판옥선·거북선 문화유산 복원 및 활용**

주관부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	관련 협업기관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부산시 부산문화재단, 해군사관학교, 목포시, 보령시 등
담당자	홍순재 학예연구사	연락처	061-270-2085

□ 추진배경

- 21세기 해양강국을 목표로 466년만에 이순신장군의 '판옥선'의 구조를 밝혀 **한민족의 뛰어난 기술력을 복원, 국민의 자긍감 고취**
- 국민과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 관광콘텐츠 지원과 복원 활용**

□ 현황(문제점)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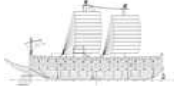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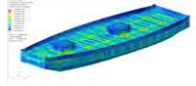



- 임진왜란 23전승의 조선수군 주력전함으로, **세계 해전사를 장식하는 중요 문화유산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구조복원 연구정보 미흡

□ 추진방향

- 수십년간 연구한 판옥선·거북선 정밀고증 복원도 제공·활용  
- (자료구축) 구조·성능·형태 등 과학적 재조명  
**국내 최초 길이 32m, 140톤 규모의 판옥선 원형 확인**  
- (복원활용) 역사문화자원 복원으로 문화유산 관광 산업 지원  
- (가치실현) 세계적 홍보, 사회적·경제적 가치 실현

□ 세부 추진사항

- 학술연구 성과 공유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해양사 연구 및 판옥선·거북선 정밀 재현 후 관광 자원 활용

연구 성과 공유	○ '22년 충남 보령시 추진 '판옥선' 실물복원 지원 - 설계비용 3억원 예산 절감		3~9월
	○ 해군사관학교 '판옥선' 실물복원('24년) 자료 제공 - 설계비용 3억 예산 절감, 사관생도 승선 실습 활용	   	

○ 판옥선 학술복원 연구 성과 학계 공유 및 전문성 확보

학계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학술대회 등 학회 발표</li> <li>○ 국·공립 및 지자체 '거북선' 복원 전문가 고증 및 지원</li> <li>○ KCI 논문게재(국외 학술지 투고 예정)</li> </ul>		6~12월
-------	---	--	-------

○ '22년 국민과 함께 누리는 조선통신사선(재현선) 활용(41회 2,050명 수혜)

- '18년 복원, 국민교육·관광 선박으로 활용 중

역사 문화 자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상박물관 문화기행/총 14회/700명(취약계층 등)</li> <li>○ 부산 조선통신사 뱃길탐방 및 축제 참여 총 18회/900명(한일 문화교류의 장 활용)</li> <li>○ 지역축제 협업(목포 항구축제 지원/총 9회/450명) - 관광객과 시민 소통 및 문화의 장 활용</li> </ul>	 	4~10월
-------------	---	------	-------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옥선과 거북선의 원형 훼손 - 잘못된 설계도·복원도 난립 (현 국내 전시 거북선 8척 운행불가)</li> <li>○ 전사교육체험 등 역사문화자원 활용 미비 ('19.6월 거북선 낙상사고, 전시 문제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연구 성과 정립으로 원형복원 가능</li> <li>○ 국·공립 도서관 배포, 전자책 이용 가능</li> <li>○ 해양문화유산 이해 증진, 관심 유도</li> <li>○ 국민과 함께 생동감 있는 현장 교육 실현</li> </ul>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옥선 복원 원형 정보 제공 한계</li> <li>○ 국민체감 사회적 가치 구현 및 역사 문화자원 활용 : '21년 총 14회 469명</li> <li>○ 판옥선 역사문화자원 경제적 비용 편익분석 전 설계 등 3.3억 소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문화자원 복원사업 기초자료 제공</li> <li>○ 문화자원 공유 해양문화 콘텐츠 지원</li> <li>○ 국민체감 사회적 가치 구현 및 역사문화 자원 활용 : '21년 총 41회 2,050명/▲437%</li> <li>○ 경제적, 문화적 가치 비용 편익분석 결과 - A)경제적 가치±B)문화적 가치=113.6억 * 한국사회경제연구원 분석결과('22. 2월)</li> </ul>

□ '22년 소요예산

- 충남 보령시 '판옥선' 복원 예산 총 30억(보령시 자체예산 추진)
  - \* 충청수영 해상공원(판옥선복원)조성 타당성용역 추진(3억)/한국자치경제연구원
- 역사자원 학술복원연구 5개년 사업 예산 10억/연구소 예산 추진
  - \* 1차년 기초설계(이충무공전서/좌수영 거북선 연구) 1억
- 역사문화자원 활용 예산 5억 / 연구소 및 **민관 협력으로 예산 추진**
  - \* 해양연구소 : (국내) 3.5억, (국외) 1.5억, 민간 : (국내외) 1억(부산문화재단)

□ 추진일정

- 충남 보령시 '판옥선' 실물 복원 설계자료 제공·기술지원('22.3~9월)
  - \* 업무협약(3월), MOU체결(5~9월), 판옥선 설계도서 30종 및 고선박 제작관련 도서 제공(9월)
- 조선통신사선 활용, '판옥선' 교육의 장 마련 (2,050명)
  - 국민과 함께하는 선상박물관, 문화기행 14회 운영('22. 4~10월)
  - 조선통신사 축제, 뱃길탐방 '배타러 가자' 18회 운영('22. 5~6월)
  - 지역축제(목포항구축제 9회 등) 협업('22.10월)
- 학술복원 연구 성과 국내외 학계 공유
  - KCI논문 게재(12월), 국제학술대회 발표(10월), 거북선 연구('22~'26년)

□ 홍보계획

- MBC방송사와 MOU협약 체결, 언론 인터뷰, 기관 SNS 홍보 등
- 선박·해양 관련 학회 등과 연구성과 공유, 활용 확산

<p>&lt;조선일보 '21. 10. 28&gt;</p>	<p>&lt;중앙일보 '21. 10. 28&gt;</p>
---------------------------------	---------------------------------

## 7 포용적 서비스 환경 구축

### 7-1(7-1-1) 시각장애인도 함께하는 디지털 조선왕실문화 즐기기

주관부서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관련 협업기관	국립서울맹학교
담당자	김경미 연구관	연락처	02-3701-7651

#### □ 추진배경

- 시각장애 어린이 대상으로 왕실 역사·문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보재를 제작하여, 소외계층의 박물관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및 나눔의 가치 실현

#### □ 현황(문제점) 진단

- 시각장애 어린이의 박물관 체험위해, 기존의 점자책이 아닌 음성지원 프로그램이 결합된 입체 촉각 IT교구 '궁궐이야기' 개발('21년)
- IT교구 '궁궐이야기'를 국립서울맹학교 교사 자문 및 시각장애 어린이 대상 시범운영의 긍정적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확대·보급할 필요

#### □ 추진방향

- '같이'의 가치 실현을 위한 문화소외계층 중심 서비스 제공
- '21년 개발한 왕실문화 IT교구 '궁궐이야기'를 보완·추가 제작하여 수혜자 확대

#### □ 세부 추진사항

- 국립서울맹학교와 협업하여 시각장애인 대상 왕실문화 IT교구 '궁궐이야기' 4세트 추가 제작

- \* 궁궐이야기 : 시각장애 어린이가 학교 교과(역사)와 연계, 왕실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음성지원(NFC) 입체 촉각 교구
- \* 국립서울맹학교 MOU 체결('21. 10월), 국립서울맹학교 선생님들의 자문과 학생 대상 시범운영을 통해 IT교구 보완 제작 추진

- 국립서울맹학교 시범 운영 및 전국 맹학교 현장에 대여를 통해 시각장애 어린이의 왕실문화 체험 기회 제공



####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일반적 점자책은 시각장애인만 읽기 가능하며 활용 요소가 다소 떨어짐	○ 일반 점자책과 달리, IT교구 '궁궐이야기'는 학교 교과과정에서 활용가능한 멀티미디어 교보재로, 학급에서 여러 학생이 선생님과 함께 동시에 활용 가능
○ '21년 개발한 IT교구 '궁궐이야기'는 한 세트만 개발되어 보급에 애로점이 있음	○ 4세트 보완·추가 제작하여, 전국 맹학교에 서비스 확대 및 나눔의 가치 실현

#### □ '22년 소요예산

- 시각장애인 교보재 제작 예산 1억원

#### □ 추진일정 및 홍보계획

분기별	내용	비고
1분기	- 교보재 제작 계획 수립 및 발주	
2분기	- 교보재 제작	
3분기	- 교보재 활용 방안 수립, 보도자료 배포	
4분기	- 교보재 활용한 시범 교육 및 전국 맹학교 대상 교보재 대여 진행	국립서울맹학교 협조

## 8 데이터·시스템으로 일하는 정부 구현

### 8-1(8-1-1) 문화재수리 이력정보 관리로 예측시스템 강화

주관부서	수리기술과	관련 협업기관	국가기록원, 국립문화재연구원, 지자체, 수리업체, 문화재청 소속 유관 부서 등
담당자	전익건 사무관	연락처	042-481-4866

#### □ 추진배경

- 건조물문화재의 **형상·속성정보\***를 시각적·입체적으로 구축(HBIM)\*\*하고 향후 문화재수리 시 수리범위·방법 등 의사결정과정에 활용하기 위함

\* (형상정보) 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재 간 접합부, 내부부재(서까래, 반자를 등) 포함 (속성정보) 부재별 재료정보, 수리이력정보, 연혁정보, 기타정보를 포함

\*\* HBIM(Historic-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수리이력(사진, 도면, 보고서 등) 등의 자료들이 문화재 3D 형상에 결합되어, 형상·속성정보의 효율적 관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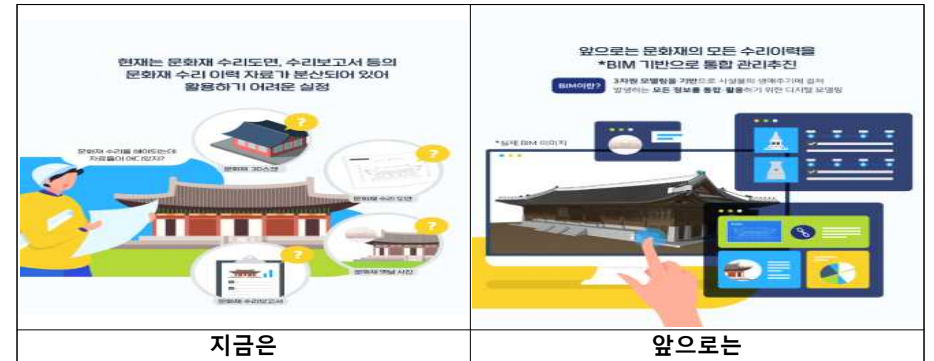
- 생애주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 현황(문제점) 진단

- 문화재수리 이력관리 미흡으로, 각종 정보가 여러 기관·단체에 분산되어있어, 문화재 수리시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리함
  - 객관적 근거자료 부족으로, 수리에 대한 주요사항 판단을 개별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도 분산·관리되는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 □ 추진방향

- 문화재 관련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일원화된 통합관리체계 마련



#### □ 세부 추진사항

- 문화재수리 기록 통합 수집·분석·수리정보 DB 구축
  - 국가기록원, 연구소, 수리업체, 도서관 등에 분산관리되고 있는 문화재 수리 관련 기록물 등을 수집하고, 연대·부재별로 분석
  - 해당 정보를 통일된 수리정보 DB 구축 매뉴얼에 따라 정리
- 문화재수리 이력관리 HBIM 모델링 구축 등
  - 문화재 이력데이터 기반 기준도면(2D)을 작성하고, 3D모델링 및 3D 모델에 부재별로 속성정보(기록물 등)까지 입력하여 HBIM 구축
  - HBIM 이력정보 유지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등



####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0개의 HBIM 구축	○ '25년까지 국보·보물인 목조문화재 250여개에 대한 HBIM 구축 완료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수리 시마다, 분산관리된 자료 수집 후 의사결정 등	○ HBIM으로 통합된 자료정보 및 유의미한 정보 등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 가능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해당없음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등  
- 기존에는 문화재 수리 준공 시, 수리보고서를 통해 수리이력을 제출받고 있었으나, 향후 HBIM이 수리현장에 전면적으로 보급·활용될 경우, HBIM의 형태로도 수리이력을 제출받도록 할 필요

□ '22년 소요예산

- 50억원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24개소에 대한 HBIM 구축 등)

□ 추진체계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통한, 용역발주·관리 추진

□ 추진일정

- (~'22.3월) 조달청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 (~'22년)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24건 HBIM 구축
- (~'23년)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40건 HBIM 구축
- (~'24년)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45건 HBIM 구축

□ 홍보계획

- HBIM 사업에 대한 학술대회(포럼) 개최시 보도(하반기)

**8-2(8-2-1) 무형유산 통합관리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확대**

주관부서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관련 협업기관	-
담당자	김성철 사무관	연락처	063-280-1491

□ 추진배경

- 디지털 일상화, 스마트폰 보급 등의 확산으로 무형유산에 관한 정보나 데이터를 요구하는 수요자의 접근 방식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음
- 문화재디지털 대전환 정책에 맞추어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의 적극적인 개방으로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및 활용도 제고

□ 현황(문제점) 진단

- 무형유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13~'21년) 추진을 통하여 무형유산 아카이브 시청각 기록물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중에 있음  
\* 사진·필름 디지털화 추진('21년 13만여건)
- 주요 영상·음성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율이 47%에 불과하여 향후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디지털화 추진 필요

<무형유산 아카이브 시청각 기록물(영상, 음성) 지털화 추진율>

(2021.12월말 기준)

자료구분	전 체	디지털화 여부		디지털화 비 율
		완 료	미실시	
영 상	5,337	2,915	2,422	54.6%
음 성	3,645	1,508	2,137	41.3%
합 계	8,982	4,423	4,559	47%

□ 추진방향

- 디지털 자료 구축 시 기록보존용, 대국민서비스용으로 구분·추진 하여 무형유산 자원 보존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 교육, 민원, 관계전문가·연구자 등 국민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의 지속적인 자료 업데이트로 자료 개방 확대

### □ 세부 추진사항

- 아날로그 음원자료(국립문화재연구소 이관자료) 디지털 변환 및 자료의 메타데이터 작성, 시스템 업로드, 백업 등
- '22년 디지털 변환 대상

매체유형	대상	생산년도	수량	비고
음원	민속종합조사 카세트테이프	1971~1998	767	

###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적인 자료 제공 요청(연구용, 방송용, 교육자료용) 빈번</li> <li>○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자 중심의 무형유산 아카이브 디지털 서비스 선제적 제공으로 수요 및 민원 해결 도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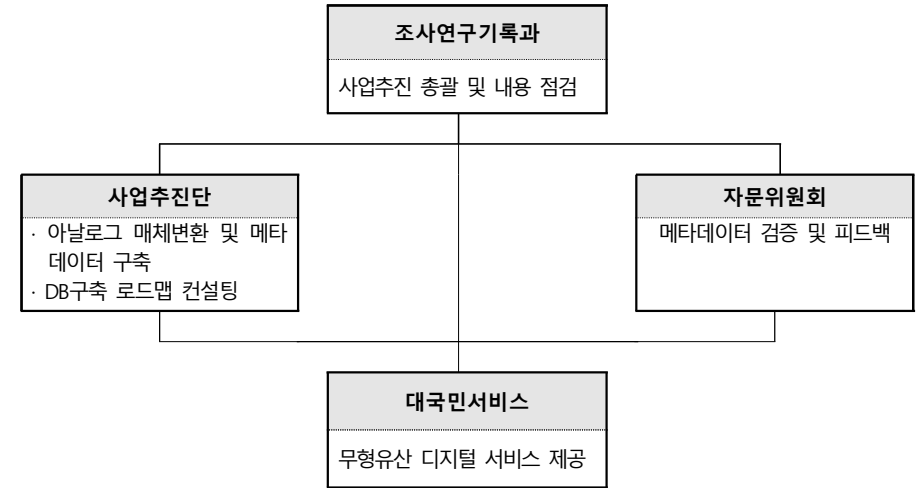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형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저조 및 연구 기반 토대 미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형유산 사회적 관심 확산과 무형유산 가치 및 지식 확산</li> <li>○ 무형유산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제공으로 무형유산 연구의 기반조성 강화</li> </ul>

### □ '22년 소요예산

- 매체변환(아날로그→디지털) 1.8억

### □ 추진체계



### □ 추진일정

- '22년도 사업 계획 수립 : '22. 1~3월
- 매체변환(아날로그→디지털), 디지털 파일 백업(CD→외장하드, LTO 등) : '22. 3월~11월
-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자료 선별 : '22. 11~12월
-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변환 및 개방 : 연중

### □ 홍보계획

-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및 무형유산디지털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8-3(8-2-2) 차세대 문화재수리 종합정보플랫폼 구축**

주관부서	수리기술과	관련 협업기관	지자체, 행안부, 문화재청 소속 유관 부서
담당자	전익건 사무관	연락처	042-481-4866

□ 추진배경

- 방문 처리하고 있는 현재의 낙후된 문화재 수리 대민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고, 시스템 내 HBIM\* 플랫폼 구축 및 수리행정 소과정 디지털화 등을 통해, 문화재 수리체계를 고도화 하고자 함

\* HBIM(Historic-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수리이력(사진, 도면, 보고서 등) 등의 자료들이 문화재 3D 형상에 결합되어, 형상-속성정보의 효율적 관리 가능

□ 현황(문제점) 진단

- 수리업 등록, 입찰 증빙서류 발급, 자격증재발급 등의 대부분의 대민업무들은 여전히 직접 방문하여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고,
  - 수리정보관련 시스템간 연동이 원활하지 않거나 연결이 단절되어 있어, 우리 청에서 수작업으로 정보정합성 등을 확인하고 있음
- 문화재 수리 시 참고할 수 있는 수리이력들이 분산관리되고 있어, 문화재 수리 의사결정과정에서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됨



□ 추진방향

- 대민서비스 항목 전자화(온라인 포털 등) 및 HBIM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수리행정 소과정 전자화 및 고도화 추진

\* HBIM 파일을 확인하려면, 고가의 구동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나, 간편히 구동·공유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종합정보시스템(웹)상에 마련

□ 세부 추진사항

- **소사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수리행정 플랫폼 구축**
  - 문화재수리 업무 중 약 75%가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용주체(문화재청, 지자체, 수리업자 등)별로 이용 시스템이 3개로 분산저장되어 있어, 1개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
  - 설계-시공-준공 등 수리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를 1개의 시스템 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 재정비 등
-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민원포털 서비스 고도화**
  - 수리업체가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민원포털 신설과 더불어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설계
  - 온라인 자격증 및 GPS기반 출퇴근기록 등 모바일 서비스 구축 등
-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HBIM 플랫폼 및 통계솔루션 구축**
  - HBIM이 온라인 시스템 상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리관련 전문가 및 대국민에게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 HBIM 정보 분석 도구 마련을 통해 유의미한 통계수치를 도출·시각화함으로써, 관계 전문가에게 과학적 의사결정 수단 지원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668개의 수리행정 관련 단위업무 중 75%가 수작업 실시	○ 668개 수리행정 단위업무 중 85% 이상 자동·전산화 구축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노후한 수리행정 시스템 이용	○ 고도화된 수리행정 시스템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 방문 접수로, 민원인 시간·비용 등 낭비	○ 방문접수없이, 온라인 처리·수수료 결제 등으로 국민 편익 증대
○ 문화재 수리 검토시, 관련자료 조사 등으로 행정력 낭비 등	○ 문화재 수리 품질 강화 가능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해당없음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등
  - 시스템 전산화로, 자격증 발급 등의 사항을 전산으로 처리가능하다는 법적 근거조항 마련 필요

□ '22년 소요예산

- 49억원 (시스템 구축, 감리·PMO, 소프트웨어 구입, 클라우드 이용 등)

□ 추진체계

- TFT 구성을 통해, 시스템 세부내용 설계시 면밀한 검토 추진
  - 구축 TFT 참여자(미정) : 문화재청 유관부서, 지자체 등

□ 추진일정

- (~'22.3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공고
- (~'22년) 시스템 구축 1단계 추진(수리행정 전산화 등)
- (~'23년) 시스템 구축 2단계 추진(HBIM 플랫폼 등)
- (~'24년) 시스템 구축 3단계 추진(모바일서비스 등)

□ 홍보계획

- 시스템 개편시,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

**8-4(8-3-1) 국민이 원하는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주관부서	디지털문화유산팀	관련 협업기관	행정안전부
담당자	박미혜 사무관	연락처	042-481-4774

□ 추진배경

- 대국민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요구사항\* 정책 반영 요구
  - '21년 5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공공데이터 개선 사항 정책 반영
    - \* '비정형 데이터 개방 확대',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마케팅 및 홍보 강화'
- 활용도 높은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지속적 개방 확대 필요
- 문화유산 공공데이터란 무엇이고, 어떻게 쓰는지 홍보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국민이 원하는 문화유산 3D 모델링 데이터 개방 확대
  - 한양도성 창덕궁, 경복궁, 종묘, 흥인지문 권역 3D 실측, 복원, 재현모델링 데이터, 문화유산 데이터 지도 목록 등 구축
- 문화유산 사진, 동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 메타데이터 구축
  - 예시) 문화유산 보존·전승 사진, 국가지정 문화재 메타데이터
    - ※ '22년 4월말 행정안전부 기업매칭지원사업 확정 시 추진 가능
-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
  -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홍보 영상 및 웹툰\* 제작
    - \* '21년 공공데이터 경진대회 우수사례 활용 홍보 영상 및 웹툰 제작
  -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개념 이해 및 활용 교육 동영상\* 제작
    - \*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개념, 개방 중인 공공데이터 현황, 활용 방법 교육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한양도성 3D 모델링 데이터 개방 건수 20건에 그침	- 고품질의 활용도 높은 한양도성 권역별 3D 모델링 데이터 개방 30건 추가 확대 - 문화유산 사진, 동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 메타데이터 100건 구축 - 대국민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교육 동영상, 홍보 동영상 및 웹툰 제작 및 개방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비정형 메타데이터 부재로 활용 저조 - 대국민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인식 저조	- 문화유산 3D 프린팅 데이터 개방 확대, 비정형 메타데이터 구축으로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활용도 향상 - 대국민 공공데이터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인식 확대, 활용도 제고

□ '22년 소요예산

○ ('22년) 0.5억

- 문화유산 사진, 동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 메타데이터 구축

☞ '22년 5월 행정안전부 기업매칭지원사업 확정 시 추진 가능

□ 추진일정

- 국민이 원하는 문화유산 3D 데이터 개방 확대('22.11월)
- 문화유산 사진, 동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 메타데이터 구축('22.10월)
-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대국민 마케팅 및 홍보 강화('22.6월)

□ 홍보계획

- 대국민 홍보 웹툰, 동영상 청 SNS 등재, 홍보('22.6월)

8-5(8-4-1)

문화유산 데이터 친화적 행정문서 혁신

주관부서	정보화담당관	관련 협업기관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정책과)
담당자	도레미 사무관	연락처	042-481-4760

□ 추진배경

- 행정문서 내 데이터의 대국민 활용, 과학적 의사결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문서의 작성방식을 데이터 친화적인 형태\*로 전환 필요  
\* 기계판독이 가능(Machine-readable)하여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과 내부 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추출할 수 있는 형태

□ 현황(문제점) 진단

- 외부에서는 자료 공개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나, 내부에서는 작성 편의성을 해치는 것에 부정적  
- (시민단체, 기업 등) 정부에서 생산되는 활용도 높은 문서와 양질의 데이터를 민간에서 이용하기 편하도록 표준화 및 개방된 형식으로 제공 요구  
- (공직내부) 데이터 활용 및 업무효율 차원에서 문서 작성 방식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나, 지나치게 작성 편의성을 해치는 것에는 부정적  
\* 행정문서 혁신 설문조사(한국행정연구원, 행안부 직원 300명 응답, 9월)  
: 필요성 공감 및 혁신수용 98.3%, 직급이 낮을수록(7급 이하) 내용 중심 간소화에 공감(95%), 작성 편의성을 해치는 수준은 동의 못함 59.8%

□ 추진방향

- 업무 불편을 최소화한 문서 작성, 개방형 포맷 활용
- 문서 꾸미기 관행보다 내용의 활용에 주안점을 두어 효율적 업무 수행의 기반으로 정착

□ 세부 추진사항

- 행정내부문서 작성 시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도록 개선
  - 효율적 데이터 검색을 위해 문서관리카드 작성시 키워드, 문서요지 등 메타정보 입력 의무화
  - 개방형 포맷 기반인 온-나라 문서의 본문(odt기반)에 최대한 쓰고, 별도 첨부파일도 개방형 포맷\* 사용
    - \* 단순 텍스트 보고서는 ODT, 표그림을 넣은 보고서는 HWPX, 숫자데이터표는 XLSX 등 활용
    - \* hwpX : 한컴2010이상(최신버전 무료패치) / odt : 온-나라 문서편집기 통해 생성 가능 (LibreOffice 등 무료 문서 편집SW 활용도 가능) / docx : MS오피스2007이상
  - 데이터 친화적 문서작성 안내서 준수 요청
    - \* 기존 문서작성 방식과 달라 어색할 수 있으나, 업무 효율과도 연결되는 사안으로 "형식보다 내용 중심, 포맷간 호환 가능한 문서 작성" 방식으로 행정 문화 개선
- 국민공개문서 작성 시 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
  - 보도자료, 연구보고서 등 공통 내용에 대하여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속성값 부여, 문서에서 데이터 추출에 필요한 사전처리작업을 빠르게 함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문서에 포함된 데이터 활용 제약	○ 문서에 포함된 데이터 활용 증대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행정문서 기계판독 수준 낮아 이용·활용 낮음	○ 행정문서 기계판독 수준 향상되어 문서에서 데이터 추출·활용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서식 내 데이터가 자동 축적되어 업무 자동화 가능</li> <li>- (외부) 검색엔진에서 메타데이터를 통해 보다 손쉽게 상세 검색·열람 가능</li> </ul>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개방형 포맷 도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개선 및 소프트웨어 도입 필요
  - 내·외부망 간 자료전송시스템이 개방형 포맷을 지원하도록 개선 필요
  - 버전이 낮은 한글 프로그램은 개방형 포맷으로 변환 불가

□ '22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체계

- 행정문서 혁신 총괄·조정 : 행안부
- 문서유형별 개선안 마련 : (보도자료) 문체부, (공공서식) 행안부, (연구보고서) 과기부, (채용공고문) 인사처
- 청 내 데이터 친화적 행정문서 혁신 독려 :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

□ 추진일정

- 데이터 친화적 행정문서 혁신 내용 교육('22.2.23.)
- 공문 기안 시 문서관리카드의 키워드, 문서요지 입력 필수화('22.3.1.)
- 공문 파일 첨부 시 개방형 문서 포맷 등록 필수화('22.5.1.)

## 9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맞는 일하는 방식 정착

### 9-1(9-1-1)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현장방재의 패러다임 전환

주관부서	안전기준과	관련 협업기관	행안부, 지자체 문화유산 관련 부서 등
담당자	신근호 사무관	연락처	042-481-4972

#### □ 추진배경

- 지난 2년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미 실시 또는 간소화로 **재난 대응역량 저하 우려**, 따라서 **실효성 있는 훈련 실시 필요**
  - ※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2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실시하지 못했고 '21년 훈련도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토론훈련 중심으로 간소화 실시
-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대규모 현장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장감 있고 효과적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필요성** 제기
  - ※ 코로나19 전염병 확진자 발생현황 등에 따라 현장훈련 계획 변경될 수 있음

#### □ 현황(문제점) 진단

- 비대면 토론훈련의 경우, 사진·지도·PPT 등 자료를 활용한 도상훈련으로 진행되고, 훈련의 관심도가 낮아 **훈련의 실효성 제고 한계**
- 그간 훈련 방식인 훈련 시나리오에 따른 **대본 읽기식 토론훈련**으로는 실제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어려움**

#### □ 추진방향

- 토론훈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감 있는 토론훈련 실시**
- 대본 읽기식 훈련을 탈피하여 **다양한 돌발상황 부여**
- **기관장 참여**를 통한 기관 차원의 훈련 관심도 제고

#### □ 세부 추진사항

- 토론훈련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현장 **드론항공촬영, 컴퓨터 그래픽 효과** 등을 적극 활용한 훈련 영상을 제작하여 **현장감 있는 토론훈련 유도**
  - ※ 드론항공촬영 및 산불·화재 컴퓨터 그래픽 효과를 이용하여 산불확산 상황 연출, 산불 확산저지 실패로 산불이 사찰(문화재)로 옮겨 붙어 문화재 화재피해 발생 상황 연출 등



- 훈련 시 정해진 시나리오 외에 재난 발생 현장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돌발상황 실시간 부여**



- '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시 본 훈련뿐만 아니라 리허설 (예행연습)에도 **기관장 참여 기획**

####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정밀한 훈련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반복·숙달 훈련	○ 현장감 있는 토론훈련, 다양한 돌발상황 부여 등을 통한 <b>문화재 현장 재난대응 능력 제고</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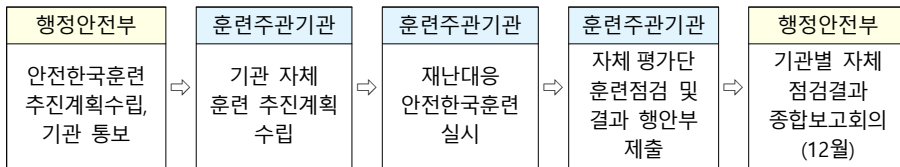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사진, 지도 등을 활용한 도상훈련 및 시나리오에 따른 대본 읽기식 훈련	○ 현장감 있는 훈련용 영상 활용으로 <b>재난 대응 토론훈련 실효성 제고</b> ○ 돌발상황 부여를 통한 <b>문제해결능력 강화</b> ○ 기관장 훈련참여로 <b>기관 차원 관심도 제고</b>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 따라 합동훈련기관 재난대응부서 역량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되어 원활한 **재난대응훈련 협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대응훈련 등 업무를 대부분 동일 부서 수행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계획 수립 : ~'22.상반기
- '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전기획회의 및 훈련준비 : ~'22.하반기
- '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22.하반기

\* '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정은 '행정안전부 추진계획'에 따름 (행안부 '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계획 수립 전)

9-29-2-1 문화유산 RPA 도입 활성화

주관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관련 협업기관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 등
담당자	여규철 서기관	연락처	042-481-4855

□ 추진배경

- 공공부문 RPA\* 도입·확산 초기로 **문화유산 부분 RPA 확산을 위한** 적극적 관심·지원과 **RPA 활성화** 도모

※ 범정부 RPA 활성화 계획 시행(행안부 협업정책과-511호, '22.2.10.)

\* **Robotic Process Automation(RPA)** : 인간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알고리즘화하고 Software로 자동화하는 기술(인간작업을 모사하는 소프트웨어 로봇)

! (예시) RPA를 활용하여 민원 발생 전 사고 개연성이(3일 이상 미배달) 있는 우편물 대상을 자동 알려주고, 조치안내문(한글파일) 자동 작성토록 자동화

※ 개발된 등기우편물 사고예방 알림 서비스를 서울지방우정청에 적용('21.6.1~)

- 단순·반복적 업무를 RPA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업무 생산성\*** 제고
- \* '업무의 신속성 향상'과 함께 수작업에 따른 오류를 차단하여 '업무의 정확성 향상'
- 직원들의 **피로감을 줄여주고**, 절감된 시간을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 (정책연구·개발 등)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

□ 현황(문제점) 진단

- 공공기관 조직원의 **RPA 인식 미흡**으로 적용 곤란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개념 >

-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사람이 하는 작업을 모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로봇**(Software Robot)으로,

- **단순·반복적 업무를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기술

< 기존 IT시스템과의 차이 >

- '디지털 워커'로서 사람과 동일하게 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

※ RPA는 구축된 IT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계적 행위(복사 붙여넣기, 자료 검색·다운로드 등)를 사람과 유사하게 수행하는 점에서 '디지털 워커(Digital worker)의 성격(인간과 로봇의 협업)



□ 추진방향

○ RPA 확산을 체계 구성 및 교육 추진

- 책임관 지정 및 선도 활동,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마련

< RPA 장점 >

- ▶ 다른 IT 프로젝트와는 달리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구현 가능
- ▶ 별도의 하드웨어를 구축할 필요 없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인프라)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소프트웨어) 개발·적용으로 구현 가능
- ▶ 낮은 비용 + 신속한 구축 → 높은 ROI(Return On Investment)
  - ※ Cost(구축비용, 교육비용, 에러비용) 대비 Savings(감소한 인건비, 감소한 업무시간) 실제 20~30% 절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유아이패스)
- ▶ 단순반복 업무의 비중을 감소시킴으로써 조직원의 직무만족도 제고 가능
- ▶ 24시간 365일 작업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오류 입력 제거



□ 세부 추진사항

○ RPA 책임관 지정('22.2월. 혁신행정담당관)

- (책임관 역할) 기관의 RPA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 조직·인력 지원, IT시스템 활용 등 총괄 조정

○ RPA 교육 및 선정과제 인센티브 제공 추진('22.3~12월)

< RPA 과제 선정기준 >

1. 규칙기반의 반복적 업무로 정형적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
  2. 시스템 간 연계 업무과정을 정의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업무
  3. 고정된 시스템이나 웹을 통해 정보가 연결되는 업무
- ※ 예시) 이메일 첨부파일 열기, 파일과 폴더 이동, 복사·붙여넣기, 양식화면에 입력, DB 읽기·쓰기, 웹을 통한 데이터 스크래핑, 구조화된 데이터 추출, 소셜 미디어 통계 데이터 수집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RPA 책임관 없음	○ RPA 책임관 지정(혁신행정담당관)
○ RPA 교육 없음	○ RPA 전문가 영상교육 등 실시
○ RPA 인센티브 없음	○ RPA 신설 부서에는 인센티브 부여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RPA 인지도 낮음	○ RPA 인지도 제고
○ RPA 유인요인 없음	○ 인센티브로 RPA 초기 활성화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RPA 도입 초기단계로 예산 및 정보 부족 등에 따라 과제 개발 미흡, RPA 확산을 위한 도입비용 등 실질적 지원 필요

- 범정부적 RPA 관련 교육·훈련 및 초기 도입 비용 지원
- 범정부 차원의 RPA 활용사례 공유 및 공모전 실시 등 확산 추진

< RPA 도입시 시스템 장애요인 >

- ▶ (프로세스) 기존 수작업으로 수행하던 업무의 기준이 체계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 기반 프로세스로 전환하는데 어려움
  - ☞ RPA 도입 이전 데이터 처리방식, 문서양식 등에 대한 표준화 필요
- ▶ (보안관련) 네트워크, PC 지킴이 등 보안 프로그램과의 충돌에 따른 오류 발생
  - ☞ 보안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RPA 설치 컴퓨터에 대한 보안 예외 설정
- ▶ (수정관리) 외부 환경(웹페이지 또는 시스템) 변화시 오류 발생
  - ☞ RPA 도입 이후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관리가 필요

□ '22년 소요예산

- RPA 확산을 협조유공부서 포상금 등 3백만원 등

□ 추진체계

- (혁신행정 담당관) RPA 과제발굴 및 디지털 역량강화 등 총괄 지원
  - \* RPA 확대를 위해서는 IT 관점이 아니라 업무혁신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
- (정보화담당관, 디지털문화유산팀 등) RPA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 프로젝트 관리, RPA 과제들이 안정적으로 개발·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적·보안적 이슈 해결

□ 추진일정

- RPA 책임관 지정('22.2월)
- RPA 확산방안 공지 및 교육('22.3~11월)
- RPA 확산방안 성과 우수부서 및 유공자 포상('22.12월)

□ 홍보계획

- 혁신행정인중 RPA 부문 선정시 보도(수시)

## 10 혁신문화 내재화 및 국내외 확산으로 국민신뢰 향상

### 10-1(10-3-1) 유네스코 본부(프랑스)서 대한민국 문화유산 입지 강화

주관부서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무형과, 국제과)	관련 협업기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인)한국문화재단, 한국 공예디자인진흥원
담당자	김현숙 사무관 (이채원 연구관 등)	연락처	063-280-1441

#### □ 추진배경

- 세계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높아진 반면 한복·김치 등 중국의 문화 침략과 군함도·사도광산 등 일본의 역사왜곡 등으로 한국의 역사 외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언론 등 지적. 이에 국제기구(유네스코 본부)에서 대한민국(문화유산) 입지 기반 강화 필요
- 고려시대부터 이어져온 국가무형문화재 ‘나전장’의 우수성을 전통에서 현대까지 아우르는 전시를 통해 오랜 역사를 거듭한 문화국가임을 강조

#### □ 현황(문제점) 진단

- 오랜 역사와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나전 공예’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유네스코, 외교부 등 공공외교 동력 확보 필요
  - \* '21년까지 총 51건 등재(세계유산 14건 / 인류무형유산 21건 / 세계기록유산 16건)
- 매해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문화 전시·공연’에서 ‘22년 한국 선정
  - \* 전시기간('22.9.1.~9.15) / 전시장소 유네스코 본부 1층 sugar홀/ 개막식 2022.9.5.(월)
- 유네스코 본부 전시 이후 바로 ‘한국프랑스문화원’에서 프랑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달 동안 연속 전시
  - \* 전시기간('22.9.19. ~ 11.18) / 전시장소(프랑스 한국문화원)

#### □ 추진방향

- 나전장의 전승자가 직접 시연, 작고한 보유자의 도안과 세계박람회 수상증을 함께 전시하여 전통성과 세계적 우수성을 최대 부각
- 인간문화재의 전통 공예품과 현대로 계승된 예술품까지 오랜 역사의 기억이 공감되는 고품격의 나전 공예품 전시
- 프랑스 일반국민이 직접 체험·공감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전시기획

#### □ 세부 추진사항

- 전통 나전의 세계적 우수성 부각한 다양한 전시 구성
  - \* 나전 역사적 계보·제작 전통 소도구·인간문화재가 제작한 나전 영상 전시 등
- 전통 기법과 기능을 계승한 현대 예술품 전시
  - \*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협업 강화로 현대 나전 예술 영역으로 확대
- 저명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으로 전시 품격을 향상하고 나전칠기 키트를 제작하여 프랑스 일반국민 대상으로 체험기회 제공

####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유네스코 본부 및 프랑스인의 한국 공예품에 대한 인지도 부족	○ 유네스코 본부 및 프랑스인의 한국 공예품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오랜 역사를 보유한 문화강국으로 인식 전환
○ ‘나전 칠기’의 인류무형유산 등재에 대한 유네스코의 호감 미흡	○ ‘나전 칠기’의 인류무형유산의 등재 가능성의 동력 확보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코로나 19로 인한 무형유산의 문화 교류 단절	○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무형유산의 국제적 문화교류와 적극적 외교 홍보
○ 나전 분야의 인간문화재와 현대작가 간의 국제적 전시 진출이 어려움	○ 전시에 참여한 인간문화재와 현대작가의 자긍심 고취와 전통문화 계승 창달 의욕을 견인
○ 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한국역사왜곡에 대한 국제적 저항의지 부족으로 내국인의 인식이 팽배	○ 유네스코 본부 직원과 프랑스 국민을 상대로 역사문화를 통한 국제적 외교시도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과 격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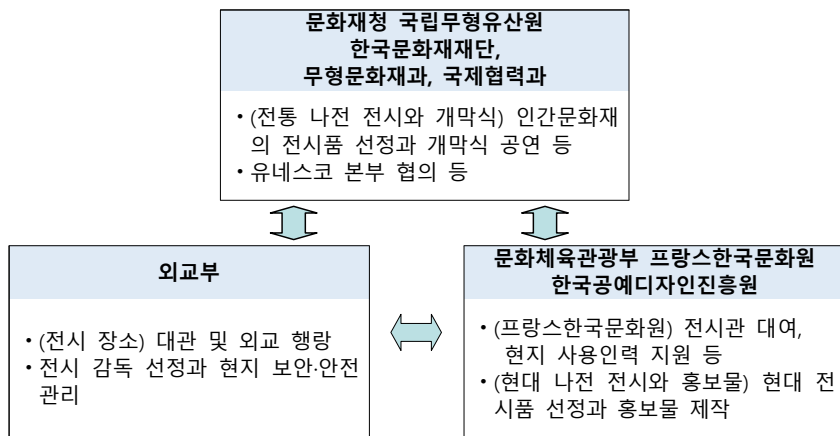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코로나 19 지속 확산으로 전시 공간 폐쇄 또는 프랑스 입국 차단 우려
- 인간문화재의 전시품 배송 시 안정성 요구와 전시 기간 중 항온 항습 등 전시환경 지속 유지

□ '22년 소요예산

- 전통 전시 (1억 7천) 외에 협업 기관(2억 3천 지원)

□ 추진체계



기관명	역 할
외교부	○ 전시관 대관, 외교 행랑, 예술 감독 선임 등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전시 개막식과 본청차원의 언론대응
국립무형유산원	○ 기본계획 수립 및 업무조율, 전통 전시품 선정
한국문화재단	○ 전시공간(건축·조명 등) 구축, 나전제작 영상 등
문화체육관광부 프랑스한국문화원	○ 전시관 대관, 전시를 위한 현지 인력 지원 등
한국공예디자인	○ 현대 전시품 선정과 전시품 배송, 홍보물 제작

□ 추진일정

- ('22.1월) 유네스코 본부의 전시장소 대관 협의
- ('22.2월) 관련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업무협의
- ('22.3월) 전통·현대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우수한 작가와 전시품 선정
- ('22.4월) 행정절차에 따른 실무 계약체결
- ('22.5월) 전시품 대여(출입국) 허가 및 보험 처리
- ('22.6월~8월) 전시장 건축과 전시품 안전한 배송
- ('22.9월) 유네스코 본부 1층 '나전 전시'와 '나전 제작 시연'
- ('22.9월~11월) 프랑스한국문화원 2·3층 '나전 전시'와 '나전 체험'

□ 홍보계획

- 유네스코 본부(프랑스) 「나전, 천년의 빛」 언론보도 ('22.8월)

**10-2(10-3-2) 문화재보존 행복주머니 씨앗가꾸기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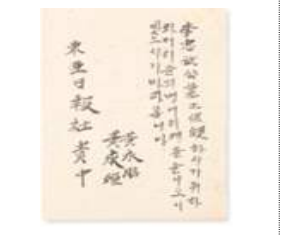

주관부서	현충사관리소	관련 협업기관	문화유산국민신탁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콧
담당자	윤상구 연구사	연락처	041-539-4614

□ 추진배경

- 일제강점기 겨레의 성금으로 이루어진 **현충사 중건**은 암울했던 시대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거국적 대중운동**으로서의 그 숭고한 역사적 의의를 오늘날에 되새기고 **문화재보존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 운동**으로 새롭게 거듭나고자 함.
- 현충사 중건 90주년을 맞이하여 민족적 차원의 나라사랑 정신으로 승화된 문화유산 보존운동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그 의미를 오늘의 세대에 계승 확산
- \* 현충사 중건을 위한 민족성금 모금 운동은 문화유산 수호를 위하여 온 겨레가 참여하여 결실을 맺은 우리나라 최초의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 운동

**【현충사 중건 역사적 경위】**

- ▶ “민족적 수치, 채무에 시달리는 충무공 묘소” 정인보 사설 보도(1931.5.14. 동아일보)
- ▶ 국내·외 각지 **자발적 성금** 접수(~1932.5. 이충무공유적보존회) [동아일보 게재]
  - \* 성금모금에 동참한 인원 약 2만여명, 4백여 단체 참여 / 16,021원 30전 모금
- ▶ **현충사 중건** 및 영정봉안식(1932.6.5. 온양역~현충사 간 3만 명 운집) [신동아 보도]
- ▶ 현충사 중건 이후 한산도 제승당, 남해 관음포 등 **충무공유적 보존운동으로 확산**

		
<b>씨앗</b> (문화재보존 민족에 호소)	<b>가꾸기</b> (온 겨레가 참여하는 실천)	<b>결실</b> (문화유산 보존·현충사 중건)

□ 현황(문제점) 진단

-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각각의 급변하는 환경에 발 맞추고자 치열한 삶의 현장에 몰입되고 있는 현실로서, 이는 곧 우리 국민들이 피로한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통문화를 활용하는 대안 마련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
- 따라서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 보존을 통하여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활용방안의 확대는 시대적 소명.
- \* 일제강점기 현충사 중건을 통하여 온 겨레가 실천한 문화유산 보존운동의 숭고한 정신은 현세대가 계승 발전시켜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필연적 소산

**【문화유산국민신탁 참여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비고
개인/법인회원 (명/백만원)	14,664 / 19 397백만원	15,439 / 19 437백만원	13,793 / 19 428백만원	* 최근의 코로나19 등의 사회현상에 따라 다소 국민적 관심에서 벗어남
지정기탁 (업체/백만원)	13 2,134백만원	8 553백만원	14 1,644백만원	

\* 현충사 청소년 문화유산지킴이 기부 활동 : '19년(5,512천원, '20년(2,230천원), '21년(1,935천원) / 문화유산국민신탁 문화재보존기금 총9,677,800원 기부

□ 추진방향

- 현충사 민족성금 중건 관련 기록물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및 활용을 통하여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그 정신을 우리사회에 전승
- 성금관련 편지글 등 관련 기록물 해제 및 국역을 통하여 학술회의 및 특별전시 개최
- **민족성금으로 중건된 현충사 90주년을 계기로 문화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의 장 마련**을 통한 **문화유산 기부문화 확산**
- 민족성금 기탁자 후손 찾기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민족문화 전승 및 현시대 대중적 국민신탁 기부문화 활성화

- 청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홍보활동 전개
- 겨레가 지킨 위토 겨레가 세운 현충사 SNS 홍보활동 및 이충무공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충사 청소년 문화유산지킴이의 제한적 소규모 활동</li> <li>○ 민족성금 기록물 대중적 활용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국민, 청소년 등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대중적 문화재보존 활동으로 확산(기부회원 3만명 목표)</li> <li>○ 관련 기록물 번역,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및 특별전시 활용</li> </ul>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보존 활동의 성과 제한적</li> <li>○ 민족성금 기록물 미공개 및 미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문화재 보존 인식 제고 및 국민신탁 기금 증대</li> <li>○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으로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현대인들이 쉽게 접할수 있도록 번역하여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 공유 및 전승</li> </ul>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22년 소요예산 : 1.5억원

- 민족성금 관련 기록물 해제 및 국역 목록화 : 2천만원
- 현충사 청소년 문화유산지킴이 교구 제작 및 운영 : 2천만원
- 문화유산국민신탁 기부운동 홍보 및 운영 : 3천만원
- 민족성금 관련 기록물 등 특별전시, 학술세미나 등 : 4천만원
- 현충사 중건 90주년 기념 문화행사 : 4천만원

□ 추진체계

- 협력기관별 주요 역할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보존 행복주머니 씨앗가꾸기 사업 기획 및 총괄</li> <li>• 협업기관 사업 운영 지원</li> </ul>
문화유산국민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보존 행복주머니 씨앗가꾸기 사업 관리-운영</li> <li>• 성금기탁자 후손 찾기 및 기부문화 캠페인 홍보</li> </ul>
청년교육사회적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충사 청소년 문화유산지킴이 모집 운영</li> <li>• 현충사 및 이충무공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li> <li>• 겨레가 지킨 위토 겨레가 세운 현충사 SNS 홍보활동</li> </ul>
충남(아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충사 중건 90주년 기념 문화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협업</li> </ul>

□ 추진일정

- 유관기관 사업추진방향 협의, 청소년 문화유산지킴이 발족(2~3월)
- 민족성금 관련 기록물 해제 및 근대문화재 등록 추진(3~8월)
- 충무공탄신기념행사, 관련기록물 학술세미나 및 특별전시(4~8월)
- 현충사 청소년 문화유산지킴이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4~11월)
  - 겨레가 지킨 위토 겨레가 세운 현충사(카카오 가치 같이)
- 성금기탁자 후손 찾기, 문화유산국민신탁 운동 전개(4월~12월)
- 현충사 중건 90주년 기념 문화행사(6~10월)
- 사업평가 및 환류, 청소년 문화유산지킴이 해단식(12월)

□ 홍보계획

- 현충사 청소년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발대식(3월)
- 문화재보존 행복주머니 씨앗가꾸기 운동(5~11월)
- 현충사 중건 90주년 기념 문화행사(10월)

**10-3(10-7-1) MZ세대 중심 조직문화 혁신**

주관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관련 협업기관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등
담당자	여규철 서기관	연락처	042-481-4855

**□ 추진배경**

- 늘어나고 있는 공직사회 'MZ세대' 공무원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정부 혁신으로 공직 내 활력 제고 필요
  - 문화유산 청년정책 등 변화에 맞는 정책수요 대응도 요구
- \* MZ세대(밀레니엄+Z) : 1990~2004년생



**□ 현황(문제점) 진단**

- 혁신부서의 주도로 일부 직원들만의 참여 한계 노출
  - '19년부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젊은 직원 중심의 '문화재청 어벤져스'가 활동했으나, 혁신부서 담당자들이 주도가 대부분

**□ 추진방향**

- (자율 운영) 청년공무원 단장중심 자율운영하되, 인센티브 강화
  - 혁신모임 '어벤져스' 활동시 부서평가에 가점반영하고 우수자에게 포상하는 지원 활동 강화
- (기관장 공감) 기관장·조직 구성원과 공감·협력하는 정부혁신
  - 기관장이 함께하는 혁신활동을 통해 수직·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도모

**□ 세부 추진사항**

- 상·하반기 정부혁신 토론회 실시(3월, 6월, 9월, 11월)
  - 조직문화 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정부혁신 확산을 위한 실천방안 논의 등
  - 기관장과 함께 자유롭고 참신한 관점에서 기존 공직관행 타파 논의
- \* 조직문화 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혁신제안 선정추진
- 자체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심사(6월, 9월)
- 정부혁신 1번가 등을 통한 혁신 홍보활동(수시)
  - 조직 구성원간 소통·갈등완화를 위한 새로운 소통채널 역할 수행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어벤져스 활동 지원 미흡 - 단순회의 등 지원	○ 어벤져스 동아리 활동 주기적 지원 - 청년직원 단장을 중심으로 혁신안 마련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수동적 활동 제약, 단순 참여 - 단장 : 혁신담당	○ 능동적 활동 추진으로 혁신안 마련 - 단장 : 청년 공무원 중 선정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3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의 경우, 조직 칸막이를 깨고 일하는데 내외적 제약요인 상존
  - 혁신모임 '어벤져스' 활동시 부서평가에 가점반영하고 우수자에게 포상하는 지원 활동 강화

**□ '22년 소요예산**

- 사례 발굴, 혁신 선도 활동지원비 등 6백만원

□ 추진체계

- (청년 공무원) 자율 운영, 정기 모임(온라인 등)
- (혁신행정담당관) 운영 소요비용 지원, 활동 결과안 체계화

□ 추진일정

일정	추진내용
2월	상반기 정부혁신 토론회, 혁신모임 어벤져스 구성(4기)
4~8월	정부혁신 영상회의 등 수시 실시
9월	하반기 정부혁신 해커톤 실시
10월	자체 우수사례 선정 심사
11월	자체 성과물 제작 등

□ 홍보계획

- 기관장의 신규 직원 실무교육 보도("22.1.26.)
- 중앙(행안부) 혁신 어벤져스 모임과 연계활동 보도



Ⅲ. 기관별 계속 추진 과제

1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매하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주관부서	운영지원과	관련 협업기관	조달청, 중소기업부 등
담당자	황상원 서기관	연락처	042-481-4660

□ 추진배경

- 혁신제품 공공시장 창출을 통해 공공서비스 개선 및 혁신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로 포용적 사회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신기술·신제품 생산 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지원, 물품·용역 계약 시 혁신제품·중소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입찰대상 선정 및 구매

□ 세부 추진사항

- 혁신제품, 중소기업 및 장애인 제품 등 법적의무구매 기관 목표 설정
- 매월 혁신제품 등 법적의무구매 실적 집계 및 기관 모니터링
- 담당자 교육 및 주기적 점검 등으로 혁신지향 공공조달 달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제품(0.51%)</li> <li>○ 중소기업제품(81.83%)</li> <li>○ 중증장애인생산품(0.64%) 구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제품(1.6%)</li> <li>○ 중소기업제품(87.40%)</li> <li>○ 중증장애인생산품(1.20%) 구매목표</li> </ul>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중소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 뿐만 아니라 혁신제품 구매를 통해 혁신지향 기업 성장 촉진	○ 친환경·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제품을 도입하여 문화재 관리 및 국민 안전에 기여

□ '22년 소요예산

- 2022년 문화재청(본청) 자산취득비 예산 9.9억

□ 추진일정

- 법적의무구매 추진계획 수립(2월), 혁신제품 및 중소기업제품 등 구매(연중)
- 혁신제품 구매 등 법적의무구매 현황 모니터링 실시(매월)
- 구매 담당자 지도 점검(5~6월) 및 혁신구매 담당자 교육(10월)
- 혁신구매 우수기관 포상(22. 12월)

**2** 공공부문 균형인사 지속 추진

주관부서	운영지원과	관련 협업기관	인사혁신처(균형인사과)
담당자	윤태정 서기관	연락처	042-481-4640

□ 여성 고위공무원단 및 본부 과장급 이상 비율 향상

- (21년 주요 성과) 여성고위공무원 승진임용(국립무형유산원장/21.3월), 여성과장급 신규 임용(3회)
  - 문화재청 여성공무원 비율(39.2%)에 비해 과소 대표되어 온 여성 관리직 비율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 평등 실현 노력
    - \* 여성 고위공무원단 임용 확대 : '19년 10% → '21년 25.0%
    - \* 4급 이상 여성관리자 확대 : '19년 15.1% → '21년 21.1%
- (22년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 확대 추진)
  - 여성 고위공무원단 임용 목표 : '21년 25.0% → '22년 27.3%
  - 본부 여성과장급 임용 목표 : '21년 21.1% → '22년 26.3%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여성 고위공무원단 비율	달성 10% / 목표 10%	달성 91% / 목표 10%	달성 182% / 목표 9.1%	달성 250% / 목표 250%	목표 27.3%	목표 27.3%
여성 본부 과장급 이상 비율	달성 10% / 목표 9%	달성 158% / 목표 10%	달성 158% / 목표 158%	달성 21.1% / 목표 21.1%	목표 26.3%	목표 26.3%

□ 정부위원회 여성·비수도권 위원 비율 향상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여성 위원 비율	35.3% / 35%	41.5% / 40%	41.0% / 40%	36.2% / 40%	36.2% / 40%	40%
비수도권 위원 비율	38.8% / 46%	51.0% / 47%	52.5% / 48%	55.9% / 49%	55.9% / 49%	50%

□ 기관 내 균형인사 추진계획

- (1) 공직 내 실질적 양성평등 제고
  - 주요직위 여성임용



구분	해당 직급별 여성비율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전체	36.6%	-	119	87	119	119
과장	14.8%	130	130	110	130	130
계장	30.8%	80	90	60	90	90
주무관	44.7%	50	90	70	90	90

- '21.11월 기준으로 문화재청 주무국, 주무과 등 6개 주요직위에 주무관급은 6직위 중 2직위로 높으나 과장, 계장의 경우 다소 부족하여 향후 인사 시 지속적으로 임용 비율 향상을 추진

○ (2)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 조성

- 장애인 수행 적합 직위의 발굴과 인식전환의 유도를 통해 취업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의 공직 임용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약자 배려  
 - 본청 주요부서(운영지원과)가 **솔선수범하여 중증장애인을 배치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향후 타 부서 및 소속 기관에서도 중증장애인 채용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 마련**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3.6	3.7	3.78	3.76	<b>4.0</b>
근로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연2회)	2	2	2	2**	<b>2</b>
산하공공기관 고용의무 이행(연2회)	2	2	2	2**	<b>2</b>

\* 법정 의무고용률 '21년 3.4%이며 문화재청은 3.76%(1,013명중 장애인 공무원수는 38명, 중증 장애인 8명은 2명으로 계상 적용)으로 충족  
 \*\* '21년 6월, 12월 기준 모두 이행(연 2회), '22년 상하반기에도 고용의무 이행 점검

○ (3)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역 대표성 강화

- 수도권 대학 출신 중심의 공채자 임용에서 지역대학 출신자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 포용의 가치 구현  
 - 지역인재 9급의 경우 9급 공채 대비 20%목표 달성 및 유지 지속 노력  
 \* 지역인재 9급 21년 3명 → 22년 5명 확대 임용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지역인재 수습직원 7·9급 임용	1	1	2	5	6

○ (4)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 사회적 소외계층 채용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기여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저소득층 출신 공무원 채용(명)	1	1	1	2	2

## IV. 정부혁신 확산 방안

### □ 교육 및 학습 활성화 방안

○ 기본 직장교육(필수) ※ 코로나19 대응으로 일정·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시기	내 용	시간	비 고
2월	문화재청 정부혁신 적극행정 교육	2H	(본청) 청장, 혁신담당관 주관
10월	문화재청 정부혁신 적극행정 교육	2H	(본청) 혁신행정담당관 주관 (소속) 10월 중 실시

○ 기관자체 심화교육 (영상교육 별도)

구분	내 용	기간	인원	내 용
토론	정부혁신 점검회의	월 1회	청차장국장 등 20명	기관장의 정부혁신 비전제시 정부혁신 정책 발전방향 모색
	기관장 주관 정부혁신 실무 워크숍	2월 9월	30명 30명	기관장의 정부혁신 비전제시 정부혁신 정책 발전방향 모색
	문화재청 어벤져스 정부혁신 토론회	3월 9월	20명 20명	새로운 관점에서 정부혁신 방안 모색
특강	기관장 정부혁신 특강	2월	30명	기관장의 정부혁신 비전제시 및 적극행정 독려
	포스트코로나 정부혁신 특강	월1회	30명	다양한 분야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부혁신 방향 모색
	정부혁신 우수공무원 특강	3월 9월	20명 20명	정부혁신 우수사례 특강
	정부혁신 실무 교육	3월	20명	규제개혁 등 실무 교육
	정부혁신 영상교육	분기별	40명	정부혁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우수사례 발굴·토론
기타	정부혁신 DAY 운영	하반기	-	전직원 대상 정부혁신 전파
	찾아가는 정부혁신 컨설팅	하반기	30명	대민접점 공무원의 정부혁신 필요성 및 제도 이해 등을 위한 교육
	정부혁신 현장 탐방	수시	-	문화유산 정부혁신 현장탐방(상시지원)

○ 기타 정부혁신 확산

- (혁신동아리)정부혁신 고수가 포함된 **혁신학습모임 구성**, 혁신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정부혁신 등 분야별 연구동아리 활동 지원(운영비) 지급

- (혁신동참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혁신적인 업무처리로 국정과제, 문화재 현장 현안처리 등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직원 **혁신 인센티브 (인사, 포상금)\* 부여**

\* (권익위)제안, (행안부, 인사처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 특별승급 등 인사특전

□ 성과 홍보 방안

○ 기관장 관심의 홍보활동 강화 및 언론 대응 외연 확대



- 기관장 언론 스킵십 강화를 통한 정부혁신 정책 인지도 제고

- \* 주요 혁신정책발표는 청·차장 직접 실시로 정책 중량감 및 주목도 제고
- \* 문화재 현장점검·정책현장 방문을 연계한 언론노출 지속 확대로 '소통하는 기관장'·'현장 속 CEO' 이미지 부각
- \* 기관장 기고문, 보도자료 내 정부혁신 문구 삽입 등 적극 홍보(내부평가 반영)

- 청년 기자단\*의 유튜브(영상), 카드뉴스, 취재 활성화로 소통 강화

- \* 기성세대가 간과할 수 있는 미래세대들의 문화유산 트렌드 수요 동감
- \* 정부혁신 BI 적극 활용

○ 홍보콘텐츠 다변화 구현

- 소비자 선호형 콘텐츠, 참여형·다채널 홍보로 대국민 관심 확대 유도

- \* 국민 관심 사업 및 ASMR\*, VR·A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선호형 콘텐츠 배포
- \* 유적 발굴 현장 등 라이브 영상 및 정책 담당자가 직접 출연하는 정부혁신 우수사례와 사람이 있는 홍보영상 등 현장 이야기 중심의 콘텐츠 제작
- \* 문화유산뉴스 제작 : 정부혁신 주요 사업 및 정부혁신인(인) 인터뷰 등 촬영·홍보

○ 내부 소통 역량 강화

- 홍보컨설팅·교육 강화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전문성 확보

- \* 보도자료 작성·언론대응 관련 전문가 교육, 선제적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 논의, 뉴미디어 홍보 교육 등 역량 강화 집합 교육 실시(분기별)

- 체계적인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관리 병행

- \* 본청 및 소속유관 기관의 연간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계획 조사, 제작 방향 및 활용 방안 상시 협의, 홍보 채널 연계 등 도모

붙임 1

정부혁신 운영 계획(총괄)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b>▶ 정부혁신 추진체계</b>												
혁신가 그룹 운영 (어벤져스, 동아리 등)		●	●	●	●	●	●	●	●	●	●	●
협업, 디지털 대전환		●	●	●	●	●	●	●	●	●	●	●
<b>▶ 역량강화 교육</b>												
기관장 주도 교육 (청·차장 주관)	●	●	●	●	●	●	●	●	●	●	●	●
교육계획 수립·실시			●	●	●	●	●	●	●	●	●	●
<b>▶ 우수사례 확산·평가</b>												
타부처 우수사례 공유 (혁신데이 운영 등)			●	●	●	●	●	●	●	●	●	●
혁신가치를 반영한 혁신행정인 선발		●				●		●			●	
문화재청 정부혁신 경진대회								●				
행안부 정부혁신 경진대회											●	
자체평가(BSC)				●		●	●				●	●
정부업무평가											●	●
<b>▶ 국민소통·홍보</b>												
언론, 온라인보도 (청차장 인터뷰 등)	●	●	●	●	●	●	●	●	●	●	●	●
월별 중점 정책홍보	●	●	●	●	●	●	●	●	●	●	●	●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 첨단기술 기반 문화재 안전관리 〉

○ 경주에 사는 직장인 김씨는 7살과 5살의 두 아이를 데리고 문화재 주변지역에 나들이 가기가 쉽지 않다.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문화재를 훼손할까 걱정이 되어서다. 그러나 지금은 문화재에 설치된 IoT시스템\* 덕분에 걱정을 덜게 되었다. 아이들이 문화재 주변에 접근해서 만지려고 하면 자동으로 안내 방송 및 경광등이 점등되어 미리 경고를 주기 때문이다.

\* 사물인터넷 : 사물의 동작을 센서로 감지, 사전경고를 해주는 시스템

〈 무장애 관람환경 조성 〉

○ 저시력자 이 씨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덕수궁을 방문하였다. 이 씨 어머니는 몇 차례 덕수궁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계단이 높은 '석조전' 안으로는 들어가 보시지 못하였다. 그러나 장애용 승강기가 생기면서 사전예약을 통해 처음으로 지층에서 1·2층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내부 관람을 즐길 수 있었다. 또한, 저시력자인 이 씨도 이번에 설치된 덕수궁 정관현 촉각모형을 직접 만져보면서, 뿌연게만 보였던 정관현 건물을 자세히 관람할 수 있었다.

«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지원대상 확대 〉

○ 공주에 사는 30대 이 씨는 100년 전에 건립된 노후 건물에 살고 있는데, '고도 이미지 찾기'라는 국가 지원사업을 통해 말끔하게 보수하여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재청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대상을 한옥 신축 위주에서 근현대건축자산까지 확대한 덕분이다. 이에 따라 이 씨와 같은 주민들은 불량한 거주환경을 개선하여 살 수 있게 되었고, 고도(경주, 부여, 공주, 익산)는 한옥과 근현대건축자산이 잘 어우러진 역사도시 경관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 문화재 규제정보 제공 일원화 〉

○ 고양 서오릉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주 김 씨는 사업이 잘돼 화성 용건릉 주변에 2호점을 개업하려고 한다. 김 씨는 문화재 주변에 위치한 2호점 토지의 규제사항을 알아보던 중 예전보다 정보 찾기가 쉬워졌음을 알게 되었다. 개업 당시에는 '지자체 토지이용규제'와 '문화재청 문화재GIS'에 탑재된 내용이 달라 각각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하나만 찾아보더라도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년 화성 용건릉 카페 건물을 건축할 때는 문화재청의 토지이용규제와 역사문화환경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사업 준비가 훨씬 수월해졌다.

\* 2022년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에서 발체

분야	세부추진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참여·협력	<b>1. 국민참여가 정책이 되는 정부</b>		
	① 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 추진	행안부	1월~
	② 청원제도 본격 시행	행안부	~12월
	③ 도전·한국 사업 고도화	행안부·각부처·지자체 등	1월~
	④ 국민참여예산제도 정착 및 내실화	기재부·각부처 등	1월~
	⑤ 공모전 운영·관리 강화	행안부	1월~
	⑥ 광화문1번가 대표성 강화	행안부·각부처·지자체 등	1월~
	⑦ 광화문1번가 기능 다양화	행안부	2월~
	<b>2. 주민참여가 생활이 되는 지역</b>		
	① 지역주민 소통·활동 공간 확대	행안부·지자체	연중
	② 리빙랩 활성화	행안부·각 부처·지자체	연중
	③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국 확산	행안부·지자체	연중
	④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 추진	행안부·지자체	1월~
	⑤ 주민자치회 발전모델 마련	행안부·지자체	1월~
	⑥ '주민e직접' 플랫폼 개시	행안부·지자체	1월
	⑦ 청년마을 및 청년공동체 지원 확대	행안부·지자체	연중
	⑧ 청년마을기업 지정 활성화	행안부·지자체	1월~
	<b>3. 혁신으로 발전하는 지역사회</b>		
	① 지역사회혁신 근거법 제정	행안부·지자체	1월~
	② 실패박람회 민관협업 확대	행안부·지자체	연중
	③ 다부처 정책연계사업 개선	행안부·지자체	연중
④ 지역자산화 사업 확대	행안부·지자체	~12월	
⑤ 지역사회혁신 지원을 위한 자원 조성	행안부·지자체	연중	
⑥ 주민공간 지역혁신 활성화	행안부·지자체	연중	
⑦ 지역사회혁신 우수사례 공유·확산	행안부·지자체	1월~	
<b>4. 협업이 일상이 되는 문화 조성</b>			
① 개방형 정책랩 도입·운영	행안부·각부처·지자체 등	연중	
② 협업 플랫폼 개선	행안부·지자체	1월~	
③ 협업 네트워크 확대	행안부·각부처·지자체 등	연중	
④ 기관간 칸막이 제거	행안부·각부처	연중	
⑤ 협업툴 도입	행안부	연중	
⑥ 협업 수준 진단 도구 개발·컨설팅	행안부	1월~	
⑦ 협업 인센티브 제공	행안부·국조실	1월~	
⑧ 협업 교육·홍보 강화	행안부	1월~	
공공서비스	<b>5. 디지털 서비스로의 혁신적 전환</b>		
	① 모바일 신분증 도입	행안부·경찰청·지자체 등	1월~
	②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행안부·지자체	4월~
	③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행안부	1월~
	④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대	국세청	1월~
	⑤ 전자증명서 서비스 확대·개선	행안부·각부처·지자체 등	1월~
	⑥ 닥터 앤서2.0 개발	과기부	~12월
	⑦ 메타버스 도입 활성화	과기부·문체부·농진청	1월~

분야	세부추진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	--------	------	------

고급서비스	<b>6.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선제적 제공</b>		
	① 정부 콜센터 시스템 통합	권익위·행안부	~4월
	②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확대·개선	국세청	1월~
	③ '보조금24' 서비스 제공 범위 확장	행안부·지자체·공공기관 등	~12월
	④ 생애주기 서비스 지속 확대 및 고도화	행안부·각 부처·지자체 등	1월~
	⑤ 국민비서 서비스 추가 제공	행안부	~4월
	⑥ 복지멤버십 전국민 확대	보건복지부	~6월
	⑦ 야외근로자 안전을 위한 기상정보 전달	기상청	~6월
	<b>7. 포용적 서비스 환경 구축</b>		
	① 수요자 기반 디지털 역량 교육	과기정통부·지자체	연중
	② 홈택스 2.0 고도화	국세청	연중
	③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의 제공	법제처	1월~
	④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 구축·운영	방통위	4월~
	⑤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개보위	1월~
⑥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	개보위	2월~	
일하는 방식	<b>8. 데이터·시스템으로 일하는 정부 구현</b>		
	① 데이터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	행안부·각 부처	1월~
	②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행안부	1월~
	③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개방	행안부·권익위·각 부처	1월~
	④ 데이터 친화적 행정문서 혁신	행안부·각 부처	1월~
	⑤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 확립	개보위·지자체	~11월
	⑥ 빅데이터 분석 기반 방역시스템 마련	질병청	5월~
	⑦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	인사처	1월~
	<b>9.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맞는 일하는 방식 개선</b>		
	① 신기술을 활용한 현장대응 강화	소방청·산림청	1월~
	② RPA 도입 활성화	행안부	1월~
	③ 온나라 영상회의 시스템 개선	행안부	1월~
	④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행안부·각 부처·지자체 등	1월~
	⑤ 사무공간 혁신	행안부	1월~
	⑥ 업무용PC의 노트북 전환	행안부	연중
	⑦ 공공부문 5G 무선망 구축	행안부·각 부처·지자체 등	연중
	<b>10. 혁신문화 내재화 및 국내외 확산으로 국민신뢰 향상</b>		
	①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	권익위·지자체·공공기관 등	1월~
	② 소극행정 예방 강화	권익위·지자체·공공기관 등	4월~
	③ 정부혁신 홍보 방식 다양화	행안부	연중
	④ 정부혁신 디지털 아카이빙	행안부·각 부처·지자체 등	1월~
⑤ 정부혁신 국제협력 활성화	행안부	11월	
⑥ 정부혁신 추진동력 강화	행안부	1월~	
⑦ MZ세대 중심 조직문화 혁신	행안부·각 부처·지자체 등	11월	